

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의원(임재훈) 선서 및 인사 1
- 1. 경제에 관한 질문 2

(10시03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원(임재훈) 선서 및 인사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10월 1일 자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임재훈 의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임재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재훈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훈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 임재훈

○의장 문희상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임재훈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임재훈 의원입니다.

부족하고 불민한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던 중 1995년 5월 김대중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동년 10월 4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24년간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와 조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57번의 크고 작은 선거에 참여하고 네 번의 공천심사위원 및 세 번의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다대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은 것은 국민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향의 어머니처럼 자애롭지만 때로는 서당의 훈장 선생님처럼 추상같이 엄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눈과 귀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정치인의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모시고 바라보면서 부족한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실행해야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특히 20개월 남은 임기이기에 2배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와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임재훈 의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08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불평등과 양극화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낮은 성장론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부의 집중으로 성장의 벽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여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실험에서 확인된 성과는 계속 가져가고 드러난 문제점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년여간 J노믹스의 성과와 또 그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수출 등 거시지표는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가운데는 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부 노동의 질이 좋아지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다거나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임금주도성장은 우리나라만 시도하고 있는 실험은 아니지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그 실험을 갖다 추진하고 있

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임금주도성장을 표방하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는 22%, 2012년에는 20%, 매년 거의 20%에 가까운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중국의 이런 성장전략, 특히 소강사회로 표방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중국 버전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독일의 하르츠 개혁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해서 850만 개의 미니 잡(mini job)이 양산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를 갖다가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3년 전에 도입하고 일정 임금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 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갖다 부과하는 법적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슈뢰더 총리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하르츠 개혁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것 또한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독일에서는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10%가 늘고 미니 잡이 대대적으로 줄어든 성과를 만들었고 동서독 간의 최저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츠 개혁의 긍정적인 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림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동남아 국가들도 임금주도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는 160%, 베트남은 130%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오늘 민 의원님 자료 보고 새삼 알게 됐습니다.

○민병두 의원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갖고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의 경우는 요란 떨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큰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임금격차라든가 상생의 목계 같은 것이 돼 있어서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상생의 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민병두 의원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각의 고유한 경제실정에 맞춰서 임금주도성장 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가 570만, 전체 취업자의 22% 정도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뜻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높습니다.

○민병두 의원 미국은 6%,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2~25%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2% 정도 됩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 갑을 관계,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40여 개 가까운 정책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예를 좀 들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접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이 협

조해 주셔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잠깐 들어가시지요.

공정위원장님, 이어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갑을 문제를 개혁해야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겠지요. 이 경제 체질을 개선할 때만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민병두 의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에 맞추어서 자영업 문제, 갑을 관계의 체질을 모두 개선했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개선되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을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법 형식적으로 본다면 대등한 사업자입니다만 현실의 거래 관행에서는 협상력의 우위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공정위를 비롯해서 문제인 정부에서는 하도급 분야나 또는 유통 3법 분야에서 거래 관계가 당사자들 사이에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갑과 을, 을과 병의 게임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어야 하지요?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은

정파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시다마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표준적인 고용임금 계약 속에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포섭되기 때문에 노동주도성장 또는 임금주도성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준적인 고용임금 계약 밖에 존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는, 즉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경영상의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다양한 패키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반드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금융위원장님!

카드수수료 문제 또 금리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자영업자 대책을 한 10여 개 정도 추진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이러한 카드수수료가 제로페이에 가까울 정도로 인하되었을 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럴 때 을과 병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해질 수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 로드맵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카드가맹점 중에 한 8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수수료 인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전체 가맹점의 80%가 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연내에 QR코드랄지 혹은 제로페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마케팅비 인하랄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지금 QR코드 일원화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다시 경제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40여 개의 정책 패키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실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40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서 시장수용성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영업자의 과밀·과포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노동시장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메이크 인 인디아, 아메리카 퍼스트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민병두 의원** 리쇼어링(reshoring)도 아시지요, 리쇼어링 2.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민병두 의원** 외국에 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랄지 공단 지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퍼스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외국에 송금되는 송금액수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진척될 것이고 적어도 30%를 교체한다면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취지에 맞도록 더 많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임금시장은 일부를 내국인노동자로 대체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학력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혁신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단 4차 산업혁명이나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처럼 외국 고학력 인력을 같이 쓰고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국인, 또 어떻게 그쪽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재정을 통해서도 4차 혁명과 관련된 인재라든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문제는 관련되는 법무부와 함께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두 의원** 국무총리님!

해외시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3회에 걸쳐서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초대했고 지난 16년 동안 128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 아프리카 자원이 중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4000개의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아프리카 플러스 원’, 차이나를 대체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해외에 나갈 때마다 중국과 일본의 야심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울 정도로 야심찬 진출 확대에 늘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교역 확대 또는 경험 상대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세계를 넓히는 차원에서 도움이 닿는 데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로 50조 원이 넘는 우리 돈을 갖다가 허비했지요.

만약에 이것을 중국처럼 아프리카 외교에 투자했다면 경제영토가 달라졌을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프리카 몇 개 나라 다니면서 우리의 ODA라든가 AECF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우리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이어서 아프리카정상회의, 중남미포럼 같은 것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권역별로 뭔가 서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통일비용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통일편익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통일을 지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분단비용과 평화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여러 자료를 보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통일의 시점이 언제냐, 어떻게 잡느냐 또는 그 이전에라도 경제협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마는 어제 또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큰 신문의 ‘통일이 미래’ 하는 시리즈를 보면 통일비용보다 통일로 얻는 혜택이 두 배쯤 많다, 이런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민병두 의원** 북한에는 27개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가령 신의주부터 평양, 해주, 남포를 잇는 이 지역을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토지를 증권화·유동화한다면 천문학적인 개발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감입니다.

○**민병두 의원** 부총리님!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책 없이 진입되고 있는데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안식년

교육제를 시키고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정부가 특히 신중년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일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직훈련 내지 직업훈련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실업급여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전직훈련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인력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중소벤처부장관님!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의원** 수출 규모로 세계 12위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민병두 의원** 그런데 온라인 수출은 오프라인 수출에 비해서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한 모순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래서 만약에 세계 각국에 우리가 이런 온라인 수출을 할 수 있는 독립 쇼핑몰들을 개설해서 한 나라에 한 100개씩의 중소기업이 진출해 나간다면, 그래서 100개국만 진출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일자리라고 봅니다.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전력 투자할 생각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저희가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기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이미 우리 온라인 업체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회에서도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온라인 전사라고 할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지만 더 배가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의원** 국무총리님!

제가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좀 건너뛰고, 혁신성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니터에 있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나아

가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일본은 소사이어티5.0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우리는 혁신성장의 목표와 상이 무엇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뒤지지 않게 동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ABC 코리아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AI입니다. 둘째는 블록체인(Blockchain)이고, 세 번째는 콘텐츠 앤 컬처(Contents&Culture)입니다.

사실 미래는 AI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IoT, 드론, 무인자동차 모든 것이 사실 AI를 통해서 지능화된 것입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빅데이터를 모아서 지능화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우리나라는 AI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BDAI를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빅데이터와 AI가 하나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고지능화하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에 구글 AI 닥터가 사람들과 관련된 질병데이터 1만 개를 모아 가지고 눈에 관련된 질병을 3분 내에 오진율 3% 이내로 진단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 의사는 오진율이 7~27%입니다. 놀랍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영국 총리는 휴먼게놈지도 1만 개를 모아서 희귀병, 난치병에 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화해 가지고 올 가을부터 난치병에 관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랄지 의료계랄지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마 이런 BDAI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인 케어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AI는 우리가 조금 후발 주자입니다. 서둘러야 될 텐데 아직 충분하게 추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에 관한 R&D 전략도 세우고 앞으로 이노베이션 허브도 만들어서 집체적으로, 체

계적으로 도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AI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 평가로는 우리가 동남아시아보다 후진국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알려 주시지요.

○**민병두 의원** AI 개발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살포시 투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오류를 거쳐서 집적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데이터가 생명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통계청을 넘어서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만들어서 양질의 것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공공데이터의 집적 또 체계화, 표준화, 활용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욕심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아까 제가 영국의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희귀병을 고치기 위한 휴면게놈지도를 모아 가지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한테 혹시 자기 고유의 휴면게놈지도를 발급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답변드릴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민병두 의원** 아마 그렇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산업입니다.

블록체인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ICO가 엔젤이나 벤처캐피털을 넘어서는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병두 의원**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금의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렵פות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특히 투자자들의 피해, 시장 과열을 우려

해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퍼블릭 블록체인, 즉 ICO와 연결될 때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프랑스 하원의원은 지난주에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ICO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는 이 ICO에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의 ICO 사례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ICO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떠한 효과나 부작용들이 있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조사 중이란 말씀은 기존 정책과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 정부가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서 25%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혁신성장을 위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 부분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야 될, 장단점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주력 산업이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한류 컬처, 콘텐츠입니다. 중국에 BTS 없습니다. K-pop 없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와 경제는 있는데 문화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무래도 두드러진 분야 중심으로 인상을 지어 주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니다마는 그러나 콘텐츠 분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흥과 지원책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모든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명의 창업가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인도는 2만 2000개의 창업기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UAE도 지금 중동의 새로운 창업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이제 창업국가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지만 혁신성장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이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또 제도전 이런 일련의 과정별 지원책이라든가 하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창업국가를 선언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ABC 코리아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제는 공격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미래를 빨리 맞이하는 곳은 북유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이노믹스, 문재인 경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따뜻하게 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민병두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49%로 하락했던 국정지지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마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의 3배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80%, 일자리의 9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90% 이상이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20년 전 IMF 외환 위기나 10년 전의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저, 최악,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슬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도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외로 옮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만에 재정을 20% 이상 더 풀었습니다. 이 규모는 전임 정부 4년 동안에 늘린 증가 규모와 맞먹습니다.

기업한테 대고는 임금은 확 올려라, 근로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은 없애라, 그러면서 돈 벌어

서 신규 채용은 많이 해라 요구합니다.

기업이, 시장이, 경제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소득주도성장, 제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임금주도성장이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지 국민들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보면 3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도와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그리고 가계가 불행을 겪게 됐을 때 받쳐 드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이 3개의 바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올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이 올라간, 말하자면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암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로부터 배제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정부의 크나큰 과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일자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정부 선포하시고 일자리 위원회·수석,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1년간의 고용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9월 고용동향은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로 갈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매년 36만 개씩 늘렸습니다. 이 정부도 첫 번째는 금년에 32만 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8만 개로 줄여 발표했는데 실적은 3000개, 정확히는 2500개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17만 3000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민간에서는 17만 개 줄어들었어요.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 개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9만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관련 업종 3개에서 3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것 안 줄었으면 32

만 개 늘어나는 것입니다. 편의점, 골목가게 등도·소매에서 12만 3000개, 음식·숙박업에서 7만 9000개, 경비원·청소용역, 시설·관리 등에서 11만 3000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 영향이 아십니까? 체질 개선해 가는 과정의 성장통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고용에 관해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용률의 추이와 실업률의 추이도 함께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시하신 여러 통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金光琳 의원** 최저임금 관련 업종에서 3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또 연령별로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의 증감과도 관련되는 업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金光琳 의원** 산업의 중추 세대인 삼사십대의 일자리가 24만 개 줄었어요.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65세 이상에서 16만 개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고용구조의 체질 개선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임금과 노동자들의 혹사 위에서 불균형 성장 또는 소득불평등의 확대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된 변화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부분적이다…… 언제 되면 퍼지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언제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 시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어떤 때는 금년 연말, 어떤 때는 내년 상반기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득, 정부의 기대하고 달리 소득도 하위 20%는 7.6% 줄어들었고 상위 20% 소득은 10.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까지 죽 개선되

어 오던 소득 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 격차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이 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은 참으로 아픈 대목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입니다. 마는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단일임금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의원** 바꾸실 의사 없습니까, 조정하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그런데 자영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입니다. 이것도 규모, 계절, 납기, 업종 좀 조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근로시간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마는 기왕에 탄력근로시간제의 확대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金光琳 의원** 벤처업, 스타트업 하시는 데서 출시 앞두고 밤새워서 일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6시에 강퇴하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업종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때 경제수장을 지내신 세 분들의 고언을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J노믹스의 자문위원장 지내신 박승 한은총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 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 계속 올리는 게 맞다.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해야 된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산타클로스 정부 포기해라. 규제개혁·노동개혁해라’, 이현재 부총리께서도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는 나중에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 개혁해야 된다’……

총리님, 이분들께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존경하는 경제 분야의 원로들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金光琳 의원** 규제개혁·노동개혁, 특히 노동개혁……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金光琳 의원** 시작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결단을 해 주셔서 큰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문제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그 위원회의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좀 더 빈번히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방향의 개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金光琳 의원** 이 부분에서 독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마는 슈뢰더 총리 2003년에 어젠다2010(하르츠 개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결국은 고용을 늘렸다,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기간제 근로를 도입해서 여성 취업률을 높였습니다. 실업급여를 32개월에

서 12개월로 줄였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습니다.

총리는 개혁은 인기 없다, 정권은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어젠다2010이 착수되는 것 보고 2005년에 불신임안을 본인이 제출하고 본인이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정적이었던 슈뢰더가 하던 이 정책을 계속해서 해서 결국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G3로 키워 냈습니다.

언론인 하였고 국회 4선 하셨습니다. 도지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륜과 내공이 뛰어난 이낙연 총리님께서 한국의 슈뢰더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는 전문가 분들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지 않아도 우리말로 번역된 슈뢰더 총리의 자서전을 제가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슈뢰더 총리 본인도 제가 뵈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제가 이런 위대한 개혁을 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마는 시기도 봐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琳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金光琳 의원**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고용동향 언제 발표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金光琳 의원** 열흘 남았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원래 둘째 주 수요일에 하는데 그 주에 휴일이 있으면 금요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金光琳 의원** 8월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녹록지 않습니다.

○**金光琳 의원** 녹록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金光琳 의원** 새 정부 들어서 재정을 20% 이상 풀었습니다.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증가시킨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재정 증가 속도가 2배 빨라진 셈입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까지 생각하면 2016년에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하는 것, 연금·수당 확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연년세세 1원 한 장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인재 키우는 교육훈련 쪽,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데 돈을 쓰든지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의 삼사십 % 담당하고 있는 SOC 쪽에 돈을 넣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쪽 예산 증가율은 전체 부문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R&D도 사상 최초로 20조 이상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에도 저희가 5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SOC 말씀이 계셨는데 SOC가 원래는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수 구조조정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구조조정을 조금 축소하면서 금년에 정부안에서는 작년 예산안보다 거의 1조 가까이 늘렸고, 또한 SOC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쪽에 대폭 증액 또 SOC 예산은 아닙니다만 소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투자에 8조 정도 투자하는 등 나름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또 하나는 예산실에 근무했던 선배들께서 각 부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 긴축재정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세계 OECD 중에서 네 번째로 튼튼하게 해 놓은 점, 이것 가지고 IMF 버텼고 2008년 경제위기 견뎌던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도 의원님,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산실의 선배분들의 말씀을 지금 후배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5년 동안 기간에 지금의 중기 재정전략을 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아마 40% 이른 초반, 41% 정도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대상수지도……

○金光琳 의원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총리께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 부분도 같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의원 부총리님, SOC도 복지입니다. 농촌 도로는 공판장에 빨리 가서 제대로 된 값 받고 그다음에 덜 이물어 가지고 상품성 높여 주는 농촌복지입니다. 신도시의, 수도권외의 급행열차는 출퇴근시간 줄여 주는 교통복지입니다.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도 결국은 SOC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이 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보다 2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SOC가 3조 7000억에서 1조 7000억으로 2조 원 줄어들어서 그만큼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부총리님, 여당 대표께서 경북에 오셔서 가지고 첫 회의를 하시고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행안부장관님은 수차례 다녀가셨는데 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을 하면서 특별한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정부안에 낸 것이 아닌 정부 최종안보다 금년 정부안이 일부 감축이 됐지만 작년 정부안보다는 컸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년 예산 최종안보다 경북 지역의

SOC 줄어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비교적 같은 입장에 있고요. 앞으로 예산심의……

○金光琳 의원 특별히 경상북도가 줄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에 강원도도 그렇고 일부 호남 지역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문제라든지 SOC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끌고루 못살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막 시작한 규제개혁 더 속도 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2명 중 1명은 서비스산업에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여야 힘을 합쳐서 필히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

오고 있습니다.

고용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습시다만 일자리 쇼크입니다.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화문에 모여 절규했습니다. 아들 알바 자리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 집에 쓸 소비력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것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절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푹푹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뿔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 여건이 괜찮았을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밀쳐지고 옆으로 밀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써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은 불균형해지고 편식하게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뺨질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해서 주저하게 되고 생색내기 좋은 단편적 정책을 앞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성공하지도, 결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악의 고용통계입니다.

올해 연평균 32만 명 목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런데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잘못 전망했기에 32만 명에서 동그라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더 빠진 3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작년에 저희가…… 작년 일자리가 32만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말에 금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만들면서 금년에 성장이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 또 다른 대내외 기관들의 전망 또 상·하방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나 대내외 여건 변화 또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부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전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사과를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요. 지난 7월, 8월 일자리 나왔을 적에 비슷한 발언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용 문제로 인해서, 특히 최근 하반기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사실 하반기부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솟검뎡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고용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요인 외에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볼 적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인정을 했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김성식 의원** 그게 어떤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주가 되

졌지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요. 또 8월 고용숫자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픈 통계 중의 하나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민감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 정말 경제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정말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요 김은숙 작가가 만든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부끄럽게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 조절, 수정·보완 얘기도 부총리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질의 중에 고용의 원인과 관련된 정책적인 요소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과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일부 신축적으로 봐야 될 것들, 좀 보완해야 될 것들, 필요하다면 일부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문제라든가,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지금 모든 기존 산업들이 낡은 성장엔진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성식 의원** 사실은 이 정부라고 해서 정책을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책을 점검할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올해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통계 나빠지기 시작하고 소득통계도 나빠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답답해하시고 당황해하셨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너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한번 경제정책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말씀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물론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취지에 충분히, 비슷한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대통령께서도 잘해 보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이럴 때는 경제라인에서 제대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뭔가 점검을 제대로 해 보나 했더니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홍장표 경제수석이 연관해서 준비하고 브리핑한 것인데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성식 의원** 대통령한테 잘못된 입력을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아마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가,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보고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성식 의원** 정말 실업으로 내몰린 사람 빼고 자영업자 빼고 현재 어떻게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통계만 내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90%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정말,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해보고 정권 차원에서 한번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5월 말, 6월 초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도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잡(job)의 질이 좀 높아진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가감 없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이렇게 통계를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하는 청와대 참모의 행위가 경제정책을 생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날려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졌던 건강한 문제의식마저도 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다시 줌, 요란하더라도 한번 정책이 제대로 가도록 의지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님과 거의 같은 취지로, 또 그런 내용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 경제팀 내에서 또 청와대 보좌진과도 또 심지어는 대통령 면전에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김성식 의원**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 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항상 검토죠, 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검토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날 적에 다른 목소리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속내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또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국민들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경제팀이 정책방향이나 시스템을 재정돈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노력하시지만 부총리께서 경제 사령탑인데 자신의 직을 걸고 과감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툭툭 짚어 놓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옹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권 초기 답답했던 일 한두 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본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억납니다.

○**김성식 의원** 그때 제가 진짜 서민을 위하여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하고 계획 잘 짜서 복지 늘려야 된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납니다.

○**김성식 의원** 그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했으면 올해 뒤늦게 5조 근로장려금 올린다고 부산 안 떨어도 되고 작년에 일자리 안정기금 3조 논란 끝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되고 그 돈 복지로 돌릴 수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의원님과의 건전한 토론이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저희가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요 또 직을 거는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그런 얘기를 바깥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 이상으로 안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두 정책 간에 갖고 있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김성식 의원** 저한테 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 문제는 그렇고 또 작년 1년 동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욕먹어도, 생색 안 나도 해야 될 일 중에 가계부채를 제대로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 제대로 못 했어요. 부총리, 아쉽지 않아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이 문제가 우리 통화정책에 딜레마가 되기도 하는데 또 소비가 늘어나는 데 제약을 주기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였고

요. 다만 가계부채의 성격상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증가율을 일단 낮추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었는데 두 번째 건 자세한 얘기니까 빼더라도 첫 번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저희가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을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달성했고 가장 최근, 아마 2/4분기로 기억합니다마는 7%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김성식 의원** 부총리님, 너무 안이한 말씀 아니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우선은 증가율을 낮추는 노력부터 하면서 조금 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1단계로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것도 다 경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정말 제대로 낮춰 놔으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도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운용도 가능했을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최경환 장관이 DTI, LTV 다 뭉개는 바람에 갑자기 가계부채 늘고 지금 정부에 많은 가계부채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았으면 고쳐야지요. 지금도 명목성장률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증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IMF는 만날 증가속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잖아요. 좀 더 죄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또 여러 차주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증가부터 낮추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성식 의원** 조금 더 낮춰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DSR도 지금처럼 시범삼아 하고요, 100%가 넘을 때만 고위험 가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미국에서는 30%만 넘어도 정말 불량 채권인데, 서브프라임인데 정말 이렇게 대출 관리하시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규 대출은 100% 정말 원리금 분할상환으로만 가도록, 건강한 대출이 되도록 당장 시행하셔야 되는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방향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또 시장과 저희가 같이 보면서, 금융 당국도 있고 하니까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성식 의원** 하여튼 증세 문제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 때 보편증세 하면서 부자 누진증세 제대로 해서 재정기반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복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찢끔찢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위기 수준 때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증액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9.7% 했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가 경제위기 때의 수준인데, 증가율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근접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특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 경제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경제 운용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재정 많이 늘린다고 당장 아픈 것은 조금 완화하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부총리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도 반성할 게 있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기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에 국정감사를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다 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 우리 국회는. 그래 놓고 마지막 한 달 예결위, 상임위 다 처리하고 날림 예산심사를 하니까 제대로 된 계획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국회부터 국정감사는 정기 국회 이전에 다 하고 정기국회 때는 두 달 이상 확실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또는 같이 작용하는 잠재성장률 저하 또 저성장 고착화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사업이라든지 플랫폼 경제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주력 제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경제팀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피스밀(piecemeal)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지금 부총리 되신 지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 짜고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단은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 시급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선사나 자동차라든지 또 타이어 이런 쪽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워낙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지만 산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전통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자동차·유화·철강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죽 작업은 해 왔고 또 일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향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경기 관리보다도 잠재성장률 자

체를 한번 레벨업하는, IMF도 우리가 구조개혁만 제대로 하면 1.25% 이상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노력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과 모든 의원님들께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단기대책으로 해서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 두 개 다 볼 수 있도록 단기적인 경기에 대한 문제,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제 여야 모두 사변적 논쟁은 그만합시다. 우리 경제의 현실, 그 만성질환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예다가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들, 중국에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큰 육아 부담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취약한 복지 수준, 인적 역량을 키워 내지 못하는 낮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우리 내수 소비에도 큰 제약을 주고 금융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 1500조의 가계부채의 문제,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규제 벽과 행정 만능주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면 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면 자신의 지지기반부터 양보와 변화를 호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JP 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 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헤아려야 합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사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 매우 긴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노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노사 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비롯하여 복지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정부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변적 논란과 작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없이는 한국 경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4대 재벌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그동안 1.8배 늘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오히려 1.4%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부담률도 낮은 수준입니다.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개인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를,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이전에 완화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제도적인 접근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저항이 있고 그래서요 지혜와 용기가 동시에 요구되는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등을 이대로 확대되도록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오늘 미미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여러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처방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 주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 세월 동안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또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이 가져온 한계를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수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환상이다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고 지출은 줄여 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현장 수용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막혀 있는 낙수효과를 제대로 뚫려 있는 낙수효과와 경

제시장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영 의원** 그런데 총리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주범까지로 말하는 것은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식 속에 그런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전면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을 몇 가지로 추려 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1.4%, 557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의 적정치보다 무려 40%가 많습니다.

결국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갈수록 낮아지는 가계소득에 따라서 내수시장의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영업이 우리 사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도하게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압박요인들 중에 덩치가 큰 것이 임차료의 부담이라든가 카드수수료의 문제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을 통과시켜 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카드수수료율이라든가 여타 문제들은 꾸준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오늘 우선 시급한 자영업자 관련 몇 가지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뒤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한 골목상권 중소 마트가 1년에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을 쟁겨 봤습니다. 저 마트의 경우에 연 매출이 약 1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약 2.6%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아서 42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 순이익은 연 2800만 원입니다. 순이익보다 많은 4200만 원, 순이익의 166%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이해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영업이익을 웃도는 경우까지 허다히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말합니다. '카드수수료만 좀 낮춰 줘도 우리가 최저임금 내겠다. 우리 최저임금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 8개의 전업카드사 순이익을 봤더니 8101억 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의 5370억 원보다 약 50.9%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카드수수료는 실제로는 약 0.7%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하고 카드회사들은 중소 상공인들, 중간치에 있는 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총리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논의를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나름대로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금융위에도 말씀하셔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너진 골목상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유통 3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만 400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골목상권의 모든 물을 퍼가 버린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유통공룡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합쇼핑몰입니다. 국토가 넓어서 교외에 발전한, 교외에 복합쇼핑몰을 둔 북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점포들이 평균 50%대, 음식·신발 업종은 70%까지 매출이 줄입니다.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70%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은 7.8%만 고용했습니다.

총리님,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한 60% 매출이 떨어져서 망하게 생겼는데 비정규직 간접고용, 최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일까요? 어느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일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가 지사로 일했던 농촌 지역까지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역경제 또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기반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형 복합쇼핑몰을 도심에다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든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다음에 최근 통과된, 10년까지 계약갱신이 연장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는 소급이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 수수료 인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법을 소급한다는 것은 법리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그 경계선에 끼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그 고통을 완화해 드릴 것인가 정부가 한번 대책을 짜 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번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6억 정도, 광역시는 3억 9000 정도 해서 그 이상의 임대료를 낸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영 의원 이 구간을 폐지하고 또 재건축 시에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통과된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실제로 보장을 못 해 주는 점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또 현재 가장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원인이 난립에 의한 매출과 이익의 감소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계인 치킨집을 보면 상위 3사가 매출의 7~9%가 증가했는데 현재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3만여 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은 무려 4만 개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밀집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지난 2014년도 박근혜정부 당시 공정위가 그전까지 있던 거리 제한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왜? 그것도 공정경쟁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결과로 과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맹본부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매달 적자는 나고 위약금 제도 때문에 폐업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알바보다도 점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낮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겠지요.

이 프랜차이즈 과밀화는 지난 정부가 거리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맹점들이 이 상태로 가 가지고는 이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은 규제의 부활이 아니냐 하는 반대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지금 점주들만 호소합니다. 희망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제도 때문에 폐업도 못 하겠다. 그리고 매출도 첫 계약보다 떨어진다. 아니면 희망폐업을 못 하면 최저수익 보장제라도 인정해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초기에 계약할 때 거짓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본사와 점주 간에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산업부와 중기부, 공정위 등이 노

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개의 보완책, 예를 들면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다음은 우리나라 전 산업에 만연되어 있는 다단계 하청업의 전속거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영 의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은 금형부터 기술, 재료까지 원청업체가 모두 제공하고 하청업체는 완제품을 납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또 불공정행위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금형을 주고 생산하게 합니다. 이것을 현장에서는 전속거래라고 하지 않고 '중속거래'라고, '노예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어느 순간에 원청이 끊어 버리면 하청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이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이 유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저승길을 어찌갈까, 돈도 없을 텐데 장례식은 바로 처리해', 이게 몇천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하청기업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야만적인 일들이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실태 파악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요. 우선 전속거래 자체가 지나치게 중속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폭적인 완화 그리고 폐지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의 관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관계, 지금처럼 착취적 관계가 계속되어 가고는 경제 전체가 건강한 지속을 담보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독일처럼 협력업체들 간의 연대를 허용하든지, 일본처럼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행으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의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목계처럼 되든지 하는 뭔가 상생의 문화랄까 제도가 있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이익공유제랄지 이익배분제랄지 그런 제도를 못 만들면 하청업이나 가맹점이나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법적으로 주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 사회의 울들, 하청기업들의 눈물,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든 오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또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저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전속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거래 중지로 인한 하청업의 도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이 일어나겠습니까? 혁신산업,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공정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야당 시절부터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지난 정부의 반대와 당시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수많은 법들을 보십시오.

현재도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생법안입니다.

대리점·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시 입주 우선권 보장 등 상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우대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민생법안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민생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약자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처참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과실이 대기업의 커다란 저수지에는 찰랑찰랑 물이 넘치고 있는데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 알바들, 비정규직들, 이 사람들의 눈바닥의 물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이 졸졸졸, 겨우 세 끼 먹고살기 힘들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이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예산 상황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dBrain)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이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원실의 국회 컴퓨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곧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통계, 올랩(OLAP)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마지막 최종 화면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죽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남의 은행 계좌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살펴보니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이게 24건입니다. 중국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불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상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코드 불일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재정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한방병원도 있더라라고 하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께서 보신 그 방법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가지고 가시는 데 적어도 여섯 번의 경로를 거쳐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을 보시고 시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여섯 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여섯 번일 따름이었지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심재철 의원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 저희가 이런 것이 유출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내부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 아이디어라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라면……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지요.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사법 당국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것이 비정상 방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또 우연히도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다섯 번의 과정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신 것이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다운로드받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거기까지 들어가신 것이 잘못이지요.

○심재철 의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다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감사관실은 정부기관이 아닌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 관련 된 것들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에서 호텔이나 면세점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제가 이름까지 대는 것은 정보 공개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가 예를 들면 플라자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서울역에서 세종에서 온 직원들이 티원 식당에서 간담회 해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호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서관이. 제가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담을 가는데 우즈베크 부총리의 선물 사는 비용입니다. 약 10만원 정도의 선물을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가서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면세점에서 썼다, 호텔에서 썼다, 백화점에서 썼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외국 호텔에서 쓴 것이 왜 한방 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심재철 의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코드가 잘못 돼서 불일치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카드사 잘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카드사의,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카드사 같은 경우에 산업분류체계에서 업데이트된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블랭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심재철 의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고쳐야 됩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것들은 카드사에 얘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 표준에 맞도록 고쳐야 될 사안들입니다.

○**심재철 의원** 카드사가 잘못했다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에서 고쳐야지요. 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왜 오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의 탓으로 돌린 적도 없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재철 의원**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 의원**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심재철 의원** 강변하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볼 수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해명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번째 논점은 지금 말씀하신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업추비 쓰는 것은 클린카드라든지 제도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심야 사용과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의 보직을 맡고 계실 적에 쓰셨던, 주말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위법성 여부, 두 번째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분리해서 보셔야……

○**심재철 의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요청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달라는 뜻입니다.

○**심재철 의원** 올랩과 디브레인이 연결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같이 디브레인 안에 있는 한 영역이 올랩입니다.

○**심재철 의원** 망이 분리돼 있습니까.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도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올랩은 분리돼 있고 디브레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던 올랩은 주요 통신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 내용이 거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심재철 의원 모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제는 그걸 제가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들어가서 190회에 걸쳐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업추비 말하고 계시지만 업추비 속에는 예컨대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거라든지 대통령행사 식자재업체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반납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쪽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반납하세요, 반납」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예시당초부터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 있고 주요 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원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이 올랩은 보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분명한 것은 올랩의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가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심 의원님의 선의를 저희가 믿고 전혀 우연히 그런 데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심재철 의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 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 시연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의원 다시 한번 공개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자료 반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의원 자, 맨 처음에 9월 3일 날 제가 접속했는데 9월 11일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역시 문제가 없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13일 날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화면입니다. 이것 보면 '통계보고서 조회 시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재부에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올랩에서, 화면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산변경 현황이라는 메뉴를 띄워 주십시오.

저겁니다. 저기에는 나의 구독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등록을 하면 예산변경 내역을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밀이라면 어떻게 이메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정보원의 올랩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

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의원님께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보안이 완벽했다면 왜 삭제해요, 그것을」 하는 의원 있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뺨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리고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스무 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에, 그중에 비정상 접속……

○**심재철 의원**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깐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니에요? 접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부총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지 않아요.

○**부의장 이주영** 자,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깐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얘기 좀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전수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자료를 보니까 400만 원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

요.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예산집행 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쓸 수……

○**심재철 의원**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 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예산집행 지침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장내 소란)

「좀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클린카드로 제한 업종이 돼서 못 쓰는 곳은 일반유희주점과 무도유희주점입니다. 그리고 기타주점은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호를 가진 데서 쓴 것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 파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 저희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으니깐 그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국민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심재철 의원** 동네 가게가 펍이라는 상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와 비정상 시간대

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 원, 비어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스시호 같은 저녁 식사 한 끼에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의 고급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의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야 사용이라는 게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거든요. 7시 반에, 8시에 조찬하신 것도 심야에 들어갑니다.

○심재철 의원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의원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 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자,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특활비에 뭐 쓰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업추비도 쓰셨고……

○심재철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리고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걸로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공개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마찬가지로……

○심재철 의원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본인이」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 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대답 자세가 그렇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날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하프패스트텐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 별관에서 22만 6000원, 넷째 날 8월 24일 날 치킨 호프에서 13만 4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 날 비서실·경호처에서 서촌호프광장에서 38만 5000원, 기강 해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병커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의원님께 유출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그 기간 중에 가서 술 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 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한 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심재철 의원 작년 11월 20일 밤 11시 25분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는 블루트레인 바에서 4만 2000원을 지불하고 작년 12월

3일 영흥도 사건이 터졌을 때, 뉴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과하세요, 사과! 훔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통령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47분에 골목맥주에서 10만 9000원을 사용을 하고요.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월 26일 날 밤 11시 3분에는 서촌가맥주에서 6만 4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적절합니까?

(「적절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건은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시다만 감사원에 전부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만 원부터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 한 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비인가지정을 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웁소!」 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 잘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업종이 누락된 깜깜이 예산을 보면 청와대가 3033건에 4억 1400만 원이고 건수로 보면 기재부가 1등입니다. 1만 3867건이고 액수로도 1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부가 1등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업추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역시 청와대가 1등입니다. 4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게 1등으로 8827만 원이 나오고요, 과기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706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훔친 정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고 큰 얘기를 드리지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하는 의원 있음)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

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를 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백화점 얘기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의 쓰지는 않습시다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필요한 비품 구입을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면 해명을 하시라고요, 문제 제기를 막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큰 말씀은 이 건을 모두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정식 접수를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업추비는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업추비 공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항목의 공개가 공개 기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업추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업추비라는 것이 마치 그냥 별 것 아닌 것처럼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호처에서 통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대통령 식자재 이게 다 업추비입니다. 그래서 업추비 전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8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국가 안위라든지 이런 기밀 관련된 사항들을 빼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비목 업추비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외의 것들에 대한, 그것이 예산항목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수용비, 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나눠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국회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업무 성격상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심재철 의원** 뭐지요? 뭐라고 나와 있지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지요. 8개 항목을 예시를 하고 이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업추비가 아닌 다른 예산 비목도 저희는 공개를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총리훈령은 각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심재철 의원** 총리훈령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업추비이고 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업추비 쓴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관님들은, 몇몇 장관님들은 업체명까지도 공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외 없이 지금 장관과 차관들은 홈페이지에 업추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금액, 시간을 쓴 것이고 몇몇 분들은 업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쓰는 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관 업추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소속 관서 임직원이 자기 업무, 자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지 못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임용 전에 일부가 받았습니까. 신분은 민간인이고 비서진에 들어가서 실제 하는 일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급여를 보전하겠다고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아, 그것 자문료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문료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명목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자문료나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개 항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청와대 일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게 입장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전수감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 시간을 갖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때 나오는 불법 또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고 저희가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정부는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임용되기 전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까?

(「그게 맞나요?」 하는 의원 있음)

(「흠친 자료 반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때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청와대 해명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내정은 되더라도 일정한 검증과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만 원을 상한을 했다고 들었는데

데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을 조금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시 감사원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이전의 비서진들은 무급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들만 유독히 돈을 받아 간 겁니다.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지금 회의를 외부분들하고 많이 하면서도 저희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그분들 시간을 저희가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계가 됐든 교수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박사들 회의 하면 10만 원, 15만 원 주는데 그분들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되셨던 분들도 그 일에 종사하는, 임용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거마비를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거 정부 10년 전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글썽요, 하여튼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심재철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추비 사용에서 일간지에서는 ‘청 직원이 왜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걸 받아서.

○심재철 의원 ‘청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훔친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훔친 자료 반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론이 보도들을 잘못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명백백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한 게 많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하러 가는데 선물 10만 원짜리 사는 것을 저희 비서관이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점에서, 마치 면세점이라고 하면 뭔가 불법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데 정당한 구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받은 것은 국가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확인 안 하시고 공개를 하시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받은 것이지요. 언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빌미를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셔서 불법 로드 받으신 자료는 반납해 주시고요.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것은 저희가 100%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잘못된 게 있으시면 질책을 해 주시고 책임 지워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우리 심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비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가, 비인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 준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전혀 불법적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도 계속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겨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아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중재를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제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언론이 보도한 것은 의원님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

을 드렸습니다.

언론은 의원님 말씀하시면 받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유흥업소에서 쓴 것이 없습니다. 펄이나 이자카야에서 쓴 일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시간이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적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11시 이후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다음에 주말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자카야나 펄에서 쓴 것이 과연 이것이 금지하고 있는 유흥업소나 무도주점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얘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조금만 더……

○**심재철 의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사실의 한 가지 자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애당초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 하는 쇼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까지 등장했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우리 사법 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우리 사법 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의원님,

누차 말씀 올렸습시다만 앞의 이 적법성 문제는 사법 당국 판단을 기다려 보시고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심재철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까 문희상 의장은 ‘과거 이석기 의원도 압수수색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려했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게 재정정보원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 다 보시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뭘 보셔서 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정보원 담당자의 고백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잘못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이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열람했다라고 덤터기 씌우고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정보관리에 앞으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는지 또는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명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부끄러울 게 없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데, 장관님께서 제 방에 와서 프로그램 시연을 공개적으로 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 풀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심재철 의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공개 시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만 주시면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라도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것을 알고, 더군다나 6년씩 그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고요.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얼마인지 제가 알 수도 없어요.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고 게시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로드받으신 자료는 반납을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또 의혹을 갖고 계신 업무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과 감사 당국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 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깝게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주영**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

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서울의 미친 집값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어 더 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기밀 불법 탈취 및 유출의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는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다시 뻔뻔하게 시연하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오전에 계속 ‘뽕 뚫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전에 답변 올렸습시다마는 아까 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만 적어도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관석 의원** 문이 살짝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마구 들어가서 안방 금고까지 열고 귀중품 마구 집어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마자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반납 요청을 정중하게 했어요. 또 그와 같은 자료가 반납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손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반납하지 않고 지금 마구 공개하고 있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비인가 영역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들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물론 일부 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오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안보나 또는 주요 인사의 동선, 감사, 인사 또 사생활과 비밀, 사생활의 자유 또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그것을 공개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를 감사원에 공개적으로 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 지금 검찰에 고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 그 고발 내용은 뭐니까, 사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사실은 3개 법…… 보좌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보법, 공공기록법 위반입니다. 비인가 지역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던 사항들 또 그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 내지는 공개하는 것들이 전부 법 위반입니다, 처벌규정까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가 기재위에서 모시면서 일을 했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보좌관 고발하기 전에 반납 요청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고지를 드렸고 또 심 의원님께도 그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밟고서 심지어는 기재위 야당, 같은 당의 간사님께도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면서 그와 같은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심재철 의원께서 공직자 윤리가 아직도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관련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절취한 장물 정치 중단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수사에 충실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재철 의원께서 현재 기재위원인데 반드시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중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 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한 규제대책이 한 번 나왔다가 또다시 느슨한 게 나오면 오히려 혼동이 되어서 시장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캐도난마식으로 한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

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요컨대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면서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년 여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9월에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관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취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다시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사태가 나온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윤관석 의원** 9·13 대책은 강력한 종합규제대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단 시장은 좀 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물에서 조금 덜 나오는 부분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또 공급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 또 일부 지역 호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관석 의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짧게는 3개월, 8·2 대책처럼 중기 정도의, 6개월 정도 시장이 안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일관된 규제정책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급 정책이 투 트랙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그야말로 강자독식의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서울에서 약 104만 개 단지에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제 차츰 재건축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건축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불안정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석 의원** 답변과 관계있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소요기간을 보니까 재건축 규제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소요기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립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공급 물량 면에서도 기존 주택 대비해서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채 하면 1500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면

에서도 당장의 공급대책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일부가 요구하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자칫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관석 의원 규제로 억누른 과열의 그 효과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가용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서 공급대책을 또 한 축에서 양 날개로, 두 트랙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서울 밖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2015년 통계로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 통근하는 거주자입니다. 이번 9월 21일 공급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월 21일 날 3만 5000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0만 호에 대한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고요.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 5000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총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문제라든가 주거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통합교통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교통대책을 한편에 세우고 한편에서는 자족시설들을 채워 나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베드타운화되지 않도록 또 서울과의 교통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장관님 답변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건설에 대해서 이견을 낸다든가 신도시 부지 선정을 기피한다든가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 가지고 지자체가 택지 개발에 있어서 뭔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듯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협의기간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발표한 3만 5000호의 경우에는 이미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과거에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한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곳들이 계신데 그런 지역 또한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되었던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 기간에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서민 삶의 질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약을 하고 당선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일부 훼손이 아주 심하게 됐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가장해서 창고로 활용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비닐벨트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급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해제 부분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저희가 공공택지지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싼 주택의, 양질의 싼값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실수요자 중에는 무주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또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나

중형 평수로 옮기려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꼼꼼하게 설계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주택자일 경우에도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입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다고만 한다면 새로운 주택으로 말 그대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윤관석 의원**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올해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상당한 물량을 포함한 대책이던데 다시 한번 요지만 설명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저희가 10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4만 호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30만 호의 주택공급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내년 6월 전에 30만 호의 입지를 모두 발표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상당한 규모인데 국민들의 인지라든가 시장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관석 의원**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나 네이밍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해 보기도 하고 대책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사용했었던 이름도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좋은 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에 좀 더 치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내용에 중심을 두시되 그래도 국민희망주택 같은 브랜드나 주거 사다리 이런 희망 정책들의 브랜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맙습니다.

○**윤관석 의원** 다음은 남북철도 등 남북 SOC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합의문 발표로 탄력받고 있는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고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기로는 신경제지도 구상이 민족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쉬운 것부터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관석 의원**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내 착공이라는 내용의 합의문

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남북 철도·도로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 또한 이 합의문이 매우 반갑고 기대감이 아주 큼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대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연내 착공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것은 정부의 변함 없는 목표입니다. 시일이러든가 준비의 기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저도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니까 공동조사라든지 실시설계 등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노력들, 준비들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각각,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면 이후에 공기를 거의 절반 정도 덜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민간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해 나간다면 연내 착공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풍부한 사례와 경험과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관석 의원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남북 SOC를 포함한 남북경협이 북한 퍼주기라고 비용 문제를 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제도로·철도에 약 43조가 든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는 남측 철도 건설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 산술적 추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하의 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력, 토지와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 1로 비용을 줄여서 건설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철도단가는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하철 건설단가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 1km 건설할 비용으로 북한 철도 30km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관석 의원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가

간도 우리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까지 할 수 있다면 이처럼 경제성 높은 사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그런 SOC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은 국내 기업한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남북경협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효과는 향후 30년 동안 최소 170조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말씀도 하였고요, 제가 어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그토록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단 재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윤관석 의원 대통령께서 인용하신 8월 15일 자료를 한번 차트로 띄워 보겠습니다. 남북경협으로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약 170조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그 효과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지금 총리님 답변을 포함해서 경제효과와 또 한편에서는 평화까지 퍼오는 퍼오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분이 바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 그리고 언젠가 올지도 모를 통일 이런 것을 내다볼 때 가장 투자 전망이 밝은 곳이 한반도이고 심지어 올해는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께서 지난주에 여기서 대표발언을 하실 때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 한국의 평화경제가 가져오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국회가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고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고질병인 무책임하고 대결적인 정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부동산 등 민생현안 해결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기회이기에 반드시 연내 착공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누구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제 방에 걸어놓은, 그 의미를 매일 되새기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세제민(經世濟民)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발 경제위기를 처절하게 경험하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16개월은 실패한 남미의 좌파경제 모방으로 시작해서 서민경제 파탄을 지나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걱정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이진복 의원 추석 잘 쇠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진복 의원 추석에 혹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한번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추석 직전에 군산 재래시장에 갔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고요. 다만 군산지역은 최근에 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정부가 했던 전통상품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활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민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진복 의원 부총리님께서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번 추석에 우리 전통시장하고 또 그 앞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오늘 전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졌지만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주도로 한 성장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 질의하시는 취지가 민생의 문제라든지 또는 고용의 문제나 소득분배의 문제라든지,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과 기업에 경제가 주는 마인드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하는, 특히 민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깊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부총리님께서서는 경제관료로서 평생을 근무해 오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각종 지표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지수는 지금 매달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과거 IMF 때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일 안 좋은 상황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진복 의원** 실업률하고 확장실업률이 얼마나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실업률이 가장 최근에 4% 좀 넘었고요, 실업자 수가 약 113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상황이 안 좋고 또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더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오늘 아침에 부총리께서 김광림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고용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그런 진단을 내놓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용이 언제쯤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오전에 어떤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진복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부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경제는 괜찮은데 고용만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수출주도성장 측면에서는 위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용을 뜯어 놓고 보면 성장의 질 문제 또 대내외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적에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를 모아서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진복 의원**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좋은 것도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중심으로만 좋다는 것은 우리가 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에서 얻는 이익이 말이지요 80%가 해외에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것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 선행지수도 지금 15개월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뒤에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모든 지표는 최악이고 언제 호전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경제위기가 아닐 수 있는지 나는 이 정부가, 특히 부총리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사례로 보여 드릴게요.

GDP 성장률은 꾸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외국인직접투자하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지표들,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소리를 청와대가 울리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 부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그 말을 들어 보고 부총리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마음이……

○**이진복 의원** 아십니까? 그것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시경제지표와 동떨어진 시장과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저희가 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어찌먼 거시 지표보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의원**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업도 하루하루 도산의 사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위기라고 판단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부총리님, 일자리 만들겠다고 국민혈세 54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성적표만 남기고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만 23조 5000억입니다. 추경 한두 번 더 하면 일자리 예산이 곧 10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 100조가 아니고 200조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면'이라는 전제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든지 피와 땀이 들어간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의 혈세 언제까지 이렇게 넣어야 고용지수가 나아질는지 명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54조 얘기는 17년·18년·19년 예산과 추경을 합친 숫자인데, 예컨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년도에 23조 5000을 정부안으로 냈습니다마는 그중에 10조는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라든지 전직훈련비입니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4조 정도 되는 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을 통해서 직접일자리 예산에 한 4조, 간접일자리 예산 한 9조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쓰면서 일자리 창출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간접일자리 예산은 민간 쪽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조장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로서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시장과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는 재정에서의 도움과 혁신성장을 통한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가 언제쯤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있어서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적어도 세 가지 부문에서,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의 확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고 경제하는 마인드가 조장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의원 부총리님 생각대로만 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 볼게요.

올해 자영업자가 상반기에 60만이 문을 닫았어요.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이 넘는 데요. 고용을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하고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수포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나 본 중소기업·중견 기업 많은 분들이, 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중중잡아서 육칠십 % 정도는 해외에 나갈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일자리와 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합니다. 국민들께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적하는 경제 악화의 원인은 저는 명확하다고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그 주범입니다.

최근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절하실 계획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의원님 두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다 경제장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저임금 문제이고 두 번째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인데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에는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안할 적에 최저임

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라든지 또 결정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금 대표적인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근로 단위기간이 지금 최장 3개월로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길게 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시장과 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정부가 이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 또 소통하고 있다는 것,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또 국회와 의논하면서 정책의 일부 보완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진복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부총리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벌써 했어야 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요. 그 정도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진복 의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서…… 장하성 정책실장마저도 이 폭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도 마치 그것이 부총리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면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대통령이나 청와대 누구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이진복 의원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대통령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합의된 내용들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주신 취지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금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진복 의원 거대 노총하고 대기업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이번과 같이 정권의 오만한 욕심만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서울 여의도의 17평 오피스텔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주 혁신도시 18평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이고요 경북 안동의 경우 경북도청 신도시 오피스텔 19평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입니다. 집값도 음식값도 교육비도 전국이 다 다릅니다. 앵겔지수가 다르다는 거지요. 지역마다 주거환경과 물가가 다르고 생활비 수준이 다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도 의원님과 그 문제의식을 같이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부결이 됐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주무부처인 고용부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진복 의원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지역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택하고 있고요, 영국은 25세 미만의 수습 인력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이라고 그러니까 꼭 한번 제도를 바꿔 보기를 권고드리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또 하나 사례를 들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말이지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샴푸도 하지 못하는, 일 배우는 견습생에게 4대보험을 포함해서 206만 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206만 원 벌기도 힘든데 동네 미장원에서 견습생한테 206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부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오른 최저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고 또 4대보험도 저희가 일부, 건보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에 가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기 때문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국회가 올해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을 때 저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회가 너무 쉽게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고 그 욕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모두 다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아무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저나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동네 미용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몇 차례 냈었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보면서 더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일정 부분 인상된 최저임금의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또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근로시간 단축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처음 안을 만들 때 IT 업계나 엔지니어링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제가 외국에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사례들을 소개를 할게요.

실리콘밸리로부터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퇴출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책임감과 높은 기술력과 빠른 일처리를 인정받아서 실리콘밸리 회사하고 거래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52시간에 묶여서 ‘이 업종의 특성상 도저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앞날이 캄캄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중소기업

사장을 제가 만났습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정부도, 정치권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 부총리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노동생산성 저하되어 있지요. 원가 상승 정말 하늘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요. 법인세 이것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 각종 세금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사 가려는 사람도 없고 이 기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매일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부총리께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기업과 시장을 여기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기를 살리면서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귀담아듣도록 하겠고, 의원님 오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 한층 새기면서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산업이 대출 위험 업종으로 구분됐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중지했다라는 보고 들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자동차부품업계 등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게 한두 달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2차 벤더들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사나 1차 벤더보고 가져가라고 통보한 지가 제법 됐습시다.

82개 상장회사 중에서 25개 회사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연 3%였는데 은행 금리도 못 갚고 있습니다. 좀비기업으로 갈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조선업

이 망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자동차산업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우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부품업체 대표들 여러 분 모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 듣고 또 건의 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쪽에서의 대책도 할 수 있는 바대로 마련하겠지만 다른 부처들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지난 2009년도에 부산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때 부산을 동북아의 파생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것이 목표였거든요. 목표 달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직 많이 미흡한 정도입니다.

○**이진복 의원** 그런데 제2 금융중심지 육성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3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 이유가 뭐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주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부분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제기돼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가 탄광 폐쇄 조치 이후에 관광특구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도시로 변화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다른 도시들이 똑같이 베꼈어요.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바리시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제3 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서울도 부산도 IFC 건물 안에 외국 금융회사가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무슨 제3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대통령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같이 죽자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신종 시대에 당대 최고의 이론가였던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믿던 회녕변법을 시행했습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현실보다도 이론을 믿었던 왕안석은 회녕변법이 오히려 국민을 죽이고 있다라는 많은 관료들의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관료에서 파직을 시켰어요. 그 결과 송나라는 회녕변법을 실현한 지 6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과 너무나 닮아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고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통찰하셔서 국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민주평화당 운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 보고 싶은 한반도의 땅끝 해남,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 아리랑의 고장,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운영일 의원입니다.

태공이 얘기했지요. 해와 달은 비록 밝으나 있어 놓은 동이의 밑은 비추지 못한다고요. 그러기에 한반도의 평화의 길에는 개선행진곡 부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경제는 국민의, 서민의 피눈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윤영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가짜뉴스들이 또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박근혜 캠프에 5억여 원을 지원 요청했다 하는 내용,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 많 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짜뉴스야말로 사회의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박근혜정부만 보더라도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대가로 8 개 언론사, 13건의 기사에 4억 2000여만 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적폐 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방송의 시간이라든가 매체의 지면을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바가 가짜 뉴스도 가짜뉴스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왜곡되고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언론에서 21년을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언론의 정확성 부족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함으로 경쟁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편파성으로 경쟁하는 언론의 지금 풍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할진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예를 들겠습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가 2017년 13개 언론사에 4억 8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 3건에 6000만 원 예산집행했습니다. 제가 예산과목 따져 봤더니 정책홍보 기획연구 운영이라고 해서 교통행정 지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정부부처에서 보도자료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정부 내의 기준으로 는 정부 광고가 허용이 되고요. 정부와 공동 기획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에 준해서 허용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 말씀을 정부에서 부처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비 예산 집행했다고 해석해도 되 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결국은 그런 성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금년 연말부터,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구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더 철저히 금지시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대가를 주고받아서 기획 기사가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부가 떳떳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왜곡된 보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연일이다시피 정부의 어디선가는 오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총리님,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3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오시아노인 것 같습니다.

○윤영일 의원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제주의 중문단지, 오시아노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곳은 진작 세계적인 관광지로 갔지 않습니까? 오시아노관광단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시절부터 총리님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주인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허비했고요. 그래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겠는가 하고 타진을 했는데 제가 지사 시절에 성

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투자회사 회장님을 제가 직접 뵙고 투자의향서를 받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기대하는 것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카지노도 지방의 경우는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내국인 카지노는 더 어려워져서 진척을 못 시키고 말았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렇게 하셔서 전라남도가 미국 플린 컴퍼니와 펜 내셔널에 방문해서 투자 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그렇게 해서 MOU까지를 체결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MOU는 추진 중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 중단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내국인 이용 카지노가 허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관심을 점점 덜 갖게 됐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면 지금 총리님께서서는 오시아노 카지노 복합 리조트 구성에 대한 의견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카지노 문제, 특히 내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만치 않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금년도 정부가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시아노를 펜션단지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면 총리님이 취임 이후에 MOU 추진 과정에서 중단됐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플린 측하고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사가 2017년 국정과제로서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을 조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비 용역까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그러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이른바 대체산업 또는 보완산업으로서 오시아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당연히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총리님께서 지사님 시절에…… JTX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전남도 자체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KDI 예타 시에도 B/C가 0.8 이상이면 AHP에서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도 국토교통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면서 총리가 이것을 꺼내기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렇다면 미리라도, 먼저라도 이 추진을 위해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라도 시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총리님, 우리 식량자급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사십팔구 % 될 겁니다, 쌀 포함해서.

○**윤영일 의원** 2017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굉장히 낮지요. 사십……

○**윤영일 의원** 목표치가 5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표치를…… 48.9%입니다. 무려……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 낮쳤고요.

그러면 곡물자급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표치가 32%였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쌀을 빼면 거의 한 자리 숫자들이니까요.

○**윤영일 의원** 그런데 실재는 얼마나? 그것 역시도 9%나 떨어진 23.4%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이 뭐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수지타산에서 농민들이 곡물 생산, 식량 생산에 매진할 만한 매력을 덜 느끼셨기 때문이겠지요.

○**윤영일 의원** 저는 우리 농업에 관해서는요 적어도 10차 산업의 발전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니까 4차 산업을 통해서 6차 산업화해야지요.

총리님,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농림부가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이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헛구호다 하는 비판이 잇따르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다음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또 5% 낮췄습니다, 60%에서 55.4%로.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5% 낮췄습니다.

목표치입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하면요, 이 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포기했다…… 아니, 세상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낮추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해석이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심정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 대책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직시해야 되고요, 자급률 상승을 위한 농지 적정면적을 확보를 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타개책을 세워야지요. 왜요? 식량은 바로 먹거리요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작물 생산·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소비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가공 산업, 2차·3차 산업, 물류 유통산업 제대로 연구·검토해본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농업 분야의 담당 부처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위축 기미가 있습니다만 농업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든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눈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윤영일 의원** 농업예산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가예산 10% 늘어날 때 농업예산은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그런 불만이나 하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납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 이름을 ‘활력예산’이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에 활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충분히 그 말씀의 충정을 압니다.

○**윤영일 의원** 제가 어제 국민 먹거리 위기, 농경 대개혁 촉구를 하는 농성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전임 농림장관은 5개월이나 공석이였다.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었다.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는데도 GMO 완전표시제는 대답도 없다. 농경과 완전한 먹거리에 대한 농경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 대통령 직속의 농경 특위, 그러니까 농어촌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공약도 답이 없다’.

국민의 목소리, 농어민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농민들의 그러한 말씀 충분히 압니다만 GMO 문제는 청와대에서 일응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농어촌 특위는 또 입법 사항이기도 해서요,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직속의 농경 특위 설치하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총리님께서 2019년도부터 고향세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제출……

○**윤영일 의원** 이게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지켜져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저도 이 관련 법안을 올렸지만 꼭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지자체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부금이나 고향세의 도입을 통해서 지자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총리님,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도 겪었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물론 산업의 종류나 분야별로 타당성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설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그 타령으로 사업을 추진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 타당성 평가의 구성 요소 중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평가하는데 지역 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낙후도, 즉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의 감안 비율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한 것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 등이나 이런 데 통해서 몇몇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일 의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들이 뜨겁습니다. 차치해 두고요, 다 아시니까.

세상에 집을 지었는데 상품을 보지도 아니하고 분양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저희들은 후분양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보고 집도 보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깜깜이 원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게 해서 소비자들 권리도 만족시키고 투명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임대 확대해야 되겠다. 왜? 청소년 문제,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 말씀처럼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등은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

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OECD 꼴찌로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여태껏 유지해 왔던 40만 명 선도 무너졌거든요, 이제. 아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영일 의원 그런데 그를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은 122조 원입니다.

이러한 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해남군과 세종시가 제일 모범적입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면 정부 정책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모범 선행 사례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전파하게 되면 정책 효과가 크게 올릴 수 있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출산대책회의 할 때마다 제가 해남과 세종의 사례를 늘 말씀드리곤 합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그런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더 전파, 확산 효과가 있게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신데요. 결혼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생각 또는 환경의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의 고려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정책만 가지고 효과를 보는 데는 계속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영일 의원 농어촌 지역의 조금 특이하고 참 서민들의 눈물이 서린 부분인데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문제요. 전쟁 등으로 소유 관계 서류가 멸실됐거나 예전에 한시법으로 시행했지만 미처 그것을 몰랐거나, 노인들이 계시니까요, 또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동안에도 거의 정기적으로 특조법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또다시 그럴

시기가 됐다 하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총리님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장관님, 커피 한 잔에 얼마인 줄 아시지요, 한 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2500원부터 한 4000원 정도……

○윤영일 의원 통상 국민들이 먹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600원 합니다.

빵 하나에 얼마 하는 줄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1000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라면 한 봉지에 얼마 하는 줄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윤영일 의원 그런데 밥 공기 하나 1000원에 팔지 않습니까? 그 쌀값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24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렇습니다. 250원도 안 됩니다. 최소한 300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원 맞추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0kg 한 가마에 딱 24만 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정부로서도, 현행법에 보면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쌀값 변동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높이는 방향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고 개정안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로서는 여당과 협의를 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영일 의원 쌀 생산비를 계산해 보니까 24만 원이 나옵니다. 20년 전의 물가상승률 74% 계산하면 24만 5000원이 나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은 적어도 24만 5000원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변동직불금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농민

들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쌀 재배를 더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쌀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목표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목표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격리 물량을 늘려서 하는 그런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자동시장격리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 재배 면적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화롭게 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마스 프랭크가 쓰시고 여기 게시는…… 국토부장관님 안 게시나요? 장관님께서 여당 의원들에게 돌린 책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사회 불평등 문제와 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와 국민은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지원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새 역사 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윤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 출신 김정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정부 정책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며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맹목적 비판에 대해서 조목 조목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 심재철 의원실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비인가정보를 열람·취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정우 의원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쟁점은 우선 정보 접근이 합법적이었는가, 그 다음에 접근된 정보의 유출이 합법적이었는가, 세 번째는 업추비 등의 집행이 합법적이었는가 이 세 가지일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앞의 두 가지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것은 감사원에 전수 감사를 의뢰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앞의 두 부분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권한 없이 비인가영역에 침입한 행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자료를 다운 받은 행위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개 자료에 업추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전자정부법, 그리고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지요.

그러면 실제 심 의원실에서 했던 불법행위를 순서에 따라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지요.

의원실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화면이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새 창을 열어서 백스페이스를 연속해서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화면이 뜹니다.

총리님, 화면 보이시지요? 거기 영어로 써 있

고 한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러한 화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잘 모릅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SNS 다 하고 계신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적 상식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는 첫 번째 화면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잘 모르겠는데……

○김정우 의원 잘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정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정상적인 접근 경로로 보기 힘든데요.

여기서 우측의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문가용 검색 폴더하고 개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공유 리포트’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걸 선택하게 되면 ‘new root’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또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감사관실용 재정집행실적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정집행실적 폴더명에 괄호를 치고 아예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지요.

그리고 다른 재정집행실적 폴더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재정집행실적 폴더에는 괄호 쳐 놓고 통계청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을 보면 정부부처의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통계청 직원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정보에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어디 용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쪽 사람들만 이용하십시오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심 의원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경로를 파악한 후에 아이디를 3개를 추가로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 동안에 190회에 걸쳐서 한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습니다. 일련의 작업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리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더니 자료가 다운로드되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부터 심 의원님과 조금 전에 경제부총리 사이의 설명이 엇갈리고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검찰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이 사안 엄중히 보시고 고소 고발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정우 의원**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면 남의 집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을 흔들어서 열어 놓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비유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이 열려 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렇지요. 문이 닫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께서 지금 시연 픽셀을 보여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백스페이스를 두 번 치는 것까지는 어찌다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특히 오랫동안 그걸 사용한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다든지 문이 허술하게 잠겨 있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의원실 ID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영역하고 정부부처 감사관실 ID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영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먼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가 의원실은 4종입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감사관실은 13종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의원실 ID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집계가 죽되어 있어서 총액에 해당되는 통계자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반면에 정부부처 감사관실 ID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카드청구내역승인

이라든지 원인행위대장 등이 되는데요. 이러한 지출행위는 보니까 개별 건수 단위로 해 가지고 상호명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부총리님, 이러한 각 부처의 카드승인내역,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 감사관실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심 의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시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랩이라고 하는 것에 250개 자료의 종이 있는데 그중에 의원실 ID로 들어갈 수 있는 자료는 91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0건 이상은 접근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접근 권한이 없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시다만 안보 문제라든지 사생활 보호라든지 등등 이런 이유로 접근 내지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시고 우리 경제의 수장이신데 왜 부총리도 못 보게 해 놓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실무적으로 들어갈 기회는……

○**김정우 의원** 권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ID를 신청해야지 권한이 있고요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기재부의 관련된 일반 직원들도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 감사관실이 감사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정우 의원** 부총리님, 그런데 이번에 많이 불법적으로 다운된 비공개 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에는 국가 안위가 위협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 요소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험성 요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국가 안보나 치안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경호에 관한 정보라든지 또는 경호처나 치안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통신장비의 문제라든지 하는, 크게는 그런 것부터 비롯해 가지고요 또 여러 요인들의 일정 또는 행사의 납품처, 납품실적 그다음에 평가나 심사위원들에 관련된 정보 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아까 상호나 옥호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 안전, 국방, 외교, 통일 또 재판, 수사, 사생활, 영업상 비밀, 생명·신체·재산 보호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감독이나 심사나 평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접근했고 또 많게는, 저희가 추정키로는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중하게 공문으로 또 유선으로 또 주말에는 문자로 자료의 반납과 정상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던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사상 행정부에서 현역 의원과 보좌진을 형사고발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는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 이상 운용을 해 왔고요, ID 발급자가 14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생겼고요.

또 아까 제 답변이나 총리께서 답변에도 나와 있어서 그 의도성이나 계획성이나 반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정보원에서 이 자료에 접근한 조회 실적들을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정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5년 동안 20회 정도 조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에, 불과 한 두 달 동안에 140회 이상을 들어왔고 그중에 72회는 불법으로 비인가 영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적이었던 아니었던 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원상회복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자료에 대한 반납을 저희가 정중하게, 또 심 의원님이 저희 기재위 위원님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중하게 반환 요청을 했고, 또 아까 제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비유까지 썼습니다만 일단 그와 같이 비인가 권역에 들어오는 루트가 확인된 이상 저희 시스템의 보완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겸해서 혹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추비 전수에 대해서 감사원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사 요청까지 한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의원과 맞고소 상태인데요,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그 고소 고발을 취하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고소 같으면 취하가 되는데요 고발은 형사이기 때문에 취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심 의원님께서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를 갖고 갔다고 하지만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그 컴퓨터 외에도 뭔가 이것이 다운로드가 된, USB가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반환을 하시는 게 저희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후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이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어차피 IT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으로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기왕에 저희는 국민들께 아주 명명백백하게 행정부에서 쓴 업추비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막은 것들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실수로 또는 극히 일부 고의로 나오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서라도 이번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또 정부로서도 이번에 노정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해킹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정보통신망법의 이번엔 고발이 되어진 48조, 49조가 대체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보면 행위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하나 그리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둘 다 해킹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해서 굉장히 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 ID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각 행정부처의 감사관실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 것, 소위 말하는 접근권한을 넘어서서 다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보여지는 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반 여부는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인가가 된 사람 또 접근권한이 없고 인가되지 않은 쪽에 액세스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운을 받은 경우, 또 그것을 상대에게 공유한 경우,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부총리가 답변했듯이 거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사법 당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거기에 위배됐다는 얘기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은 해킹을 처벌하는 것이니까 해킹에 해당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글썽, 그것은 사법 당국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해킹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해킹에 해당됐기 때문에 고발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심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마치 청와대가 규정에 어긋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을 했고요 또 당사자의 해명이니까 객관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신문에 기자 몇 분이 지적했던 음식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토대로 보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객관적인 제3자가 봐도 문제될 것이 없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자들의 현장답사는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심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의 실상은 우리 청와대가 365일 그리고 24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보면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4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실상 그대로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SNS상에서는 이번에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알뜰살뜰한 씬씀이를 보여줬다고도 하는데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SNS를 봤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대단히 간간하신 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는 고가의 헬스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아그라 등 의약품 구입비를 과도하게 썼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현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도 청와대가 이미 해명을 했고 또 감사원이 감사를 할 거니까요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심 의원이 기재위 위원 아닙니까? 기재위 위원으로서 기재부를 국정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정감사 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국정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총리께서는 지금 국회의원도 세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총리께서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이런 맞고소 고발 상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그 감사위원직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사보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본 의원은 국정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 의원이 기재위 사임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들을 하루속히 반납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통계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왜곡된 주

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정우 의원 통계청장을 경질하신 겁니까, 아니면 차관급 인사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던 대로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당시에 아홉 명의 차관급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일 뿐이고요 그 뒤로도 차관급 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통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왜냐하면 통계가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효과의 판단 기준으로 또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례를 보면 일례로 토지 소유가 불평등하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 대선 후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소득불평등 통계를 작성은 했는데 발표는 또 하지 않았거든요.

통계의 중립성·객관성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비판은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통계를 입맛에 맞게 분석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이 밝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 절대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하려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게 노출되고 있고요.

(「통계청장……」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최근 가계소득 조사와 관련해서 그 신뢰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사의 표본과 관련된 문제 제기일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통계 결과를 공표할 때 표본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화가 생겼으면 그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 과거 자료와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은 떠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만 표본이 60%까지 가까이 바뀌었는데 설명이 그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표본이 그만큼 많이 바뀌기 전과 단순 비교한 것은 통계청이 한 것은 아니지만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가계동향조사가 1963년부터 작성해 온 통계 아닙니까? 이제 시대 상황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제대로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할 텐데 지금 개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작년 말부터 그것을 해 왔습니다. 하는 이유가 소득 통계의 표본과 수입 통계와 지출 통계의 표본이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통계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소득은 분기별로 하고 지출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둘 다 합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의 통계청장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안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60년을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통계로 지금 바꾸는데요,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생명일 테니까요, 그것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낙수효과에 더 이상 기댈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정책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제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최선을 다해 경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해킹, 획득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정부를 흠집내서는 아니됩니다. 이와 같은 아니면 말고식의 정부 비판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멀리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 대 99의 불평등한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공정하게 바꾸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의원**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 자료사건…… 정부 여당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내용은 고사하고 절차 가지고 입 맞춰서 덮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 신적폐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역주행 대국이라고 합니다. 원전 역주행에서부터 법인세 역주행, 최저임금 역주행, 근로시간 역주행, 4차 산업혁명 역주행, 많지요? 노동계의 역주행, 공무원 정원 역주행, 이 땅국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경제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완전 골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사태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날 새면 가게 문 닫는 게 일이고 공단마다 공장 매매, 임대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안 되어서 가게 공장 내놓는 마당에 어느 누가 말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흔했던 알바 일자리도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란 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역주행 중에서 원전 역주행, 소위 탈원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탈원전 1년 만에 한 해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초우량기업이던 한전이 적자 1조 원이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을 제치고 따냈던 22조 규모의 원전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태양광발전 한다고 대한민국 산과 호수는 온통 파괴되고 투기 광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중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자력 인제는 씨가 말라가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학자들, 기업인들이 반세기 넘게 피땀으로 쌓아 온 원전 기술, 천신만고 끝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데 단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반도체가 그랬듯이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우리 원전을 더 다듬고 키우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국부가 창출될 터인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이 귀한 보물덩어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까? 과연 국가가 국민의 밥그릇을 걷어찰 권리가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이 검증되면서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수많은 국가들은 물론 심지어 산유국까지 원전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이 207기나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쿠시마 사태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일본마저도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5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입니까?

산자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월 26일 바라카 원전에서 문 대통령께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 왜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원전이 갖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맹우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원전이 갖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맹우 의원** 원자력의 효율성? 효율성이 좋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의 축복을 외국에는 전파를 하면서 왜 우리들 스스로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원전의 건설은 각 국가의 경제성 또 안전성, 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건설을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원전을 아예 급격하게 중단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중지해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의원** 그래서 불과 일이 년 전에만 해도 ‘원전만이 살 길이다’ 해 가지고 온 주민 설득해서 원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건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전임 백운규 장관께서는 ‘탈원전 하지만 수출 지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혹시 성 장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원전의 수출은 저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보완 대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 그런데 참 문제지요. ‘위험해서 우리는 탈원전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 원전이 쓸만하니까 당신 나라들은 사라’ 이것 아닙니까? 참 뻔뻔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원전……

○**박맹우 의원** 들어 보세요.

당장 우리가 맡아 놓았던 영국에서부터 우선협상 지위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원전에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어떻게 다른 나라 수출이 되겠습니까? 정말 탈원전은 엄청난 국부 창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장관께 한번 여쭙볼게요. 전임 장관은 1년 내내 정권 코드 맞춘다고 내 탈원전 소리를 되풀이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고장 난 레코드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 장관, 정말 실무적으로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장관이신데, 이제 임명되었지요, 성 장관도 고장 난 레코드가 될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가 취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의 24.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전력 부분의, 그중에서 원자력 부분에 보탬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체……

○**박맹우 의원** 아니,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벌써 지금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전체 에너지원의 전환, 거기에다 수요혁신까지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박맹우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능하신 장관에게 부탁드릴게요. 일국의 장관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들어 주실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 장관 들어가시지요.

다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상 음성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지요.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 이 연설을 보면 원전에 관한 한 최고의 명연설인 것 같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또 세계적인 확장 추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멀리 갈 것 없이 작년 대선 때 유력 후보 5명 중에 4명이 탈원전을 공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박맹우 의원** 그거 보니까 탈원전 공약이 기억나세요?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가까운 것이 더 먼저 기억나는 것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박맹우 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박맹우 의원 보니까 지난 한 해만도 축구장 190개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지고 금년 6월까지 157개의 숲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보니까 태양광 광풍으로 그야말로 온 국토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천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가지고 온통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투기장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거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맹우 의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의존율이 우리는 2030년까지 잘해도 20%인데요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맹우 의원 제가 뒤에 물을 텐데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국토 파괴 행위를 계속 허용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 좋습니다.

아까 말한 20%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확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이것이 허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한 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의 태양광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고리 5·6호기를 태양광 전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무려 529만개의 패널을 덮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풍력·태양광 전기 비중이 한 1% 남짓 됩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거의 국토에 전부 태양광 지붕 다 덮고 풍력 설비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예산은 100조 들고 거기다가 비 오고 바람 안 불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거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OECD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

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발달과 코스트 액이나 속도로 볼 적에 지난날보다는 앞으로가 더 싸게, 더 쉽게 지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의원 그 유용한 원전을 놔두고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온 나라를 다 덮어도 20%까지는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재고하십시오.

우선 우리나라 최대인 영월 태양광발전소 한번 보세요. 삼사십 년 소나무 수천 그루 베어 내고 야산 5개 깎아뚫고 태양광 13만 개의 패널을 설치했는데 고작 39MW입니다. 아시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것도 17% 발전 효율이고 1일 평균 4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비용도 원전의 4배 정도 비싸게 먹힙니다. LNG 발전도 마찬가지이지요. 단가도 비싸고 온실가스 발생하지요. 수급상 에너지 안보도 안 됩니다.

총리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 그만 속입시다. 탈원전 좀 재고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탈원전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막아서 정말 존경받는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맹우 의원 정말 제가 여야, 국회의원을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것 탈원전 좀 재고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곡하게 한번 건의드리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이라고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60여 년에 걸쳐서 원전의존도를 낮추어 가자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발전량으로 볼 때 원전의존도가 33.8%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4%가 안 됩니다. 그리고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80% 이상이 오염물질이다 하는 것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남권, 존경하는 박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많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의원** 지금 총리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일본도 지금 5기 가동하고 20기 준비하고 22%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뒤에는 우리 원전이 제로가 됩니다. 신·재생을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33.8%에 달하는 나라와 이제 4%에서 먼 미래에 같지 어떨지 모르는 국가를 그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꼭 온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 의원** 불과 며칠 전에 독일 메르켈도 ‘탈원전, 이것은 재앙이다’, 바로 핀란드 녹색당 대표도 ‘정답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원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정말 나라 걱정,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탈원전 방침의 재고를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박 의원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완전 바보등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한번 보십시오. 7000억 원 들여서 새것 만들어 놓고 온갖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22년까지 수명 연장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울진·영덕·삼척에서는 근 10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원전 6기의 백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전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주장하고 사정해 가지고 수천억 예산 들여서 한창 준비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돌연 백지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을 넘어서 국가 폭력 아닙니까? 정말 어찌하면 참으로 슬픈 코미디입니다.

문 정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탈원전은 그야말로 국가 자살행위입니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 반드시 재고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박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연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연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 출범 16개월 동안 무려 열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부동산 정책을 열두 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작년 8·2 대책, 이번의 9·13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정책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사다리, 주거복지 로드맵,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열두 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3 대책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 서울 중심의 일부 지역의 급상승 움직임들은 많이 진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주 의원** 아파트값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우선 두드러지는 게 지방은 오히려 내려가고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시점보다도 이상하게도 8월 2일 이후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값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8·2 대책이 본격화된 올해 4월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부의 개발 호재들,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9·13

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최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언주 의원 8·2 대책 전에는 사실은 강남도 2점몇 % 정도 인상이 되고 있다가 그 이후에 1년 동안 근 1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대책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대책을 자꾸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의 요인,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폭등 현상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는 상황, 현실과 맞지 않는 거고요.

○이언주 의원 그건 이제 8·2 대책 전후를 보면 아시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통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는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으로 해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불안심리,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심리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급격한 상승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우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결국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의 해법은 뭐겠습니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공급이 많았을 때라고 그래 가지고 꼭 가격이 떨

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지요, 공급을 수요가 있는 곳에 늘려 줘야 되는 거지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늘려 주는…… 내가 원하는 수요는 여기에 있는데 공급을 딱 데다가 아무리 늘려 줘 봐야 사실은 수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건과 달리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공급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찍어 내듯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언주 의원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건 공급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원하는 곳에 확대해야 되고, 수요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수요가 생기느냐? 편의시설이 있고 교육환경이 좋고 그리고 거기의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통 인프라 늘려 주고 교육 인프라를 늘려 주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늘려 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예,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사고 폐지가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8학군의 수요를 늘립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지금 오히려 SOC라든지 여러 가지…… 저도 수도권 의원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공사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외곽이 아니라 서울 중심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지금 서울 중심지에도 보면 재개발·재건축 하고 있는데 슬럼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제성이 너무 안 나와서 재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이 나오는 지역은 상

관이 없겠지만 중랑구라든가 강북의 여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공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먼저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선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GTX를 비롯해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도 서울에서만 104곳에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도 안전진단이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늘려 주면 거기에 맞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장치들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울 도심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고 오히려 거기서 정부 공공과 개인의 재산 증식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양도세 중과 문제도 사실은 취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거래 절벽을 만들어 내는 역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자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만 유동성이 과잉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갈 데가 없느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정부의 어떤 반시장적인 여러 경제 정책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부동산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큰 곳에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장관이

시지만 저는 경제부처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데에 좀 더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면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장관님께서 금리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금리가 중요한 요인 중에는 하나일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금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 가구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언주 의원** 지금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자체하고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만 해도 그렇고요 성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우리 국토부하고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습시다.

○**이언주 의원**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언주 의원** 어떤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광명시의 경우에는 지구 내의 주민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교통 문제 해소, 뉴타운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의견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그게 해결이 되면 찬성한다 이런 취지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이 택지지구 개발이 발표된 상황을 보면 모양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십니까? 너무나 준비 없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길게 대로를 끼고 주택들을 짓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환지계획도 있고요 또 뉴타운계획도 있고 지금 굉장히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에 지금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왕 투자를 할 거면 그런 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이 아주 불쌍사나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냅니까? 이것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었던 지역이고 광명지역의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명시 쪽과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림을 보지만 그 그림은 그린벨트 밑에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그닥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언주 의원** 글썄,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어떤 정부든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방식의 개발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이 돼서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왜 정부가 이런 일에 앞장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급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지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에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정부가 보금자리 지역을 지정을 했다가 몇 년 동안 지연시키고 있다가 다시 또 해제를 했다가 다시 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연속성을 떠나서 이런 행태는 이제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관둬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라든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공람하고 있는데 그것 중단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서 철회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걸 다 추정입니다만 5대 인프라 개발 비용만 하더라도 최대 225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와 도로만 일단 나와 있는데요, 뒤에는 안 나오니까?

대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경험은 투자입니까, 원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남북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는 것들도 전부 가정을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 기간, 방식, 규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로 간에 분담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라든지 또 남북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언주 의원 현재 북한의 차관만 해도 1조가 넘게 지금 있지요? 못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언주 의원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매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그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요.

○이언주 의원 얼추 어쨌든 수백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언주 의원 이것 누구 돈으로 나가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현재는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 기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도 그건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어쨌든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경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 우리가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해서 돈을 퍼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또 북한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투자여야 한다.

그러면 투자의 전제는 뭐냐?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국제사회와 협의되면서 할 거냐에 우선 크게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당사국들이 남북한 또는 앞으로 국제사회나 국제기구까지 혹시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제를 드리자면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지금의 남북 경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의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제가 되고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언주 의원 국제사회의 협조와 제재의 해제가 전제지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입니다. 북한 경제체제가 이 상태로 있다면,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북한 시장의 구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의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당 경제는 암시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

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제기구 수장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중에 예를 들면 과거에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국제기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EBRD 총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유럽권에 체제 전환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는 동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국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려면 그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건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의원님. 지금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의 전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개에 따라서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것 외에도 보면요, 그때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급여, 그게 과연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정말 불편한 교통을 다 감내하고 다닙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에요. 이 형평성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예타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하시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철도노선 같은 것이 되겠지요.

○이언주 의원 예타가 나올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남북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관련된 내수 진작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특히 낙후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내수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조금 완화된 방안 내지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문제만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 문제는 조금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간에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협조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 별 여러 가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되 상황 진전에 따라서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면 정부도 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천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적어도 경제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일관되게 ‘차분하고 질서 있게’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언주 의원 조사를 하러 가고 하나까 하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언주 의원 조사를 하러 가잖아요, 철도사업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도 지금 유엔사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제가 국제기구나 주요 우방국 재무장관이라든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진행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질서 있고 차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속에 있는 그 행간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대북 경험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꿈도 좋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언주 의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여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있는 서해안의 중심 도시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여기구 의원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자 국민 모두가 소유자인 국가 에너지 정책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과거 우리는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이유로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 화력과 가장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여기구 의원 총리님, 그동안 우리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이유로 원전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그러나 총리님,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원가 계산에 원전의 안전 비용, 입지선정 갈등 비용, 고준위 방폐물 등 핵연료 사후처리 비용 등 이런 것들도 함께 계산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여기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와 같은 입지선정 갈등 비용 등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원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임 정부 때인 2016년 산업부의 추계에 따르면 64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구 의원 이 비용도 현재 원전 발전원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면 중간저장시설에 약 26조 3565억 원이 들고 영구처분시설에 37조 7736억 원이

들어서 총사업비만 64조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 추계비용도 말이지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이 추가가 안 된 겁니다. 이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추계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준위 방폐장 건설만 하더라도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우리 어 의원님 고향도 그랬었고요 저희 고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경주로 그게 낙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물며 고준위로 가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상상을 초월한 갈등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숨겨진 외부 비용들이 원전 단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재 원전의 경제성은 고준위 방폐물 등 사후처리 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올해 3월에 미국 에너지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가면 원자력은 MWh당 92.6달러가 들어가는데 LNG는 49달러, 육상풍력은 59.1달러, 태양광은 63.2달러가 소요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에 가면 원자력이 MW당 95파운드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육상풍력은 61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가 들어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2028년에 가면 태양광이 완전히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년이 안 남았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들 가운데 미국의 기관에 따르면 태양광 대비 원전의 발전단가가 46%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국 기관은 51%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놀라워서요 원가가 많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구 의원** 예, 우리 정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후핵연료, 소위 말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임시저장시설에 넣어 두고 있는데요 월성의 경우는 2021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처분장이 따로 없어서 그냥 원전 옆에 무작정 쌓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지금 당장 월성원전의 경우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쌓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연내에 내부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래야 됩니다. 아마 또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어날 텐데요. 총리님 아시겠지만 1990년도 안면도 사태, 1994년도의 굴업도 사태, 2003년의 부안 사태를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특히 부안 사태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 고향에까지 와서 원전의 현실을 보고 가셨고요. 또 저희 고향 또한 방폐장 문제로 찬반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제 사무실이 계란깨나 맞았었습니다.

○**여기구 의원** 아마 총리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추억인 것 같지만요,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그렇게 홍역을 치렀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까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방폐장 관련 일을 무엇 한 것 있습니까? 한 것 있으면, 진행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별로 그다지, 중저준위 방폐

장을 경주에 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것도 노무현 정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지금 고준위 방폐장 관련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위험천만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만 더 짓자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이나 탈원전이나의 논쟁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방폐장 문제는 선진국들이 앞다퉀 탈원전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선진국들마저도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구 의원** 총리님,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혹시 오스트리아의 츠벤덴도르프 원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오스트리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었는데 국민들 사이에 반대가 있어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전을 다 지어 놓고 국민들이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영구 폐쇄를 결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그런데 오스트리아 분들이 왜 이 원전을 이렇게 국민투표를 거쳐 가면서 폐쇄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결국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기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진에 대한 우려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방폐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방문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에 가면 귀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귀싱은 100% 에너지 자립 도시거든요. 옛날의 그냥 그 시골 도시가 지금은 일자리들이 넘쳐흐릅니다. 옛날에는 그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비엔나로 일하러 갔던 청년들이 오히려 거꾸로 비엔나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일을 하러 오고요. 수많은 친환경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도시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우리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총리님,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원전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에 압도적으로 많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고려 사항일 테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비용을 다 합쳤을 때 발전단가가 오히려 원전이 더 비싸게 든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싸게 먹힐 수가 있다 이런 믿음 때문일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햇볕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태양광발전에 눈을 떠서……

○**여기구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오히려 미국보다 더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시작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기구 의원** 예, 맞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제가 거기서 살아 봐서 아는데요 독일·오스트리아는 해가 4시면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에너지가 아주 발전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6년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7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원전 참사,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막중합니다. 이처럼 원전사고는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체르노빌 근처에는 아직도 항문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요 한쪽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육손잡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후손 대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원전의 위험성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 파멸로 가는 것이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 국회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요 후쿠시마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위험하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정부의 책임자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것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다가 앞쪽으로 돌아서 우리 한반도에 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웃 나라로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여기구 의원** 이게 저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 면에서 100%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고는 언제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2016년에 경주,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경주, 포항이 포함된 우리나라 동남권은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약 300만 가까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 합치면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구 의원** 이 점을 유념해서 원전 대책을 잘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총리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한 번에 모두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관한 정책은 이것입니다.

우선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재임 중에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었지만 10년을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폐쇄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원전이 5기이기 때문에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는 원전을 통한 발전량이 오히려 늘어나서 33.8%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무슨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탈원전을 바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부터 이 속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65년 정도가 걸려야만 원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과도하게 높은 원전의존도를 천천히 낮춰 가자,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명이 다해서 위험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만 자연스럽게 도태시킨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도태시키는 비중이 앞으로 65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천천히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원전을 줄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살아 계시는 때는 탈원전은 구경 못 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 의원님은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의원** 총리님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폐쇄 결정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올해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기? 이게 처음입니까, 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 고리가 있었지요.

○**여기구 의원** 예, 박근혜정부 때 원전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리 1호기?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만 그렇게 공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 문제가 정치 투쟁의 일부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루아침에 모든 원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차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서 60여 년간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총리님께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구 의원** 그리고 총리님,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정책 흐름 정도를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OECD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아예 원전이 없거나 원전을 감축하고 있거나 원전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이른바 제로화로 가고 있거나 그런 상태이고요. 신규 발전설비, 새롭게 발전설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액의 70% 정도는 신·재생에너지 쪽이고요 원자력은 4% 이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원전 이후 시대를 준비 또는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다, 훗날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의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전부 신규 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지 신규 원전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OECD 국가로 좁혀서 봐도 원전 투자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73.2%가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이 되었고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발전설비 전망을 보아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5배 넘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전 설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여기구 의원**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감사합니다.

○**여기구 의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렇습니다.

○**여기구 의원** 장관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들 중에서 실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사우디에도 어플라이를 해서 민간과 같이 하고 있고 또 체코와 폴란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구 의원** 체코하고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체코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체코도 좋은 의향을 갖고 건설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협력을 하면서 의향 타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우리 원전을 잘 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여기구 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들이 지금 현재 이들 나라에게 원전을 수출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의 건설은 그 나라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원전 수출하는 곳의 이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있을까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파는 나라의 원전정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구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탈·감축정책 한다고 해서 그동안 해 왔던 수출·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저희 경험적으로도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우디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자국의 원전사

업 참여를 요청하는 레터를 저희들에게 보냈고요. 또 영국과 지금 현재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함께 하고 있는데 한영 산업부장관끼리 원전과 관련된, 신규 원전과 원전해체 협력 관련된 각서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전정책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원전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또 경제성 있게 건설해 줄 것인지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장관님,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정부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현재 원자력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3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비해서 물론 숫자가 줄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새로운 운영의 방법들 또 원자력 수출로 인해서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가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인 그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과 또 고용창출 능력은 현재 원자력산업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쪽 산업은 저도 블루오션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88기의 원전 중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150개 정도이고요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원전해체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기술 좀 갖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저희도 사실은 원전해체의, 상업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용 원자로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선진국 대비 약 한 80%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1년까지 저희들이 이 원전해체 기술의 100% 국내 자립화를 위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필요할 여러 가지 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 이것 해서 꼭 이 시장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에너지 전환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저주에 가까운 선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동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 원전에 집착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수립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여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수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번 추석 민심이, 지역민들을 만나서 지역민들이 경제 고충 해소연하는 것은…… 유사 이래 제가 느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일 자리를 걱정하는 젊은이들 또한 사교육 부담과 입시 혼란을 겪는 학부모님들의 고충,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중소기업들의 고충, 또한 부동산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절망하는 서민들의 고충,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추석 명절에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장밋빛으로 포장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 버렸고, 소상공인을 외지로 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에 수천억 수조 원의 원조를 하겠다는 뉴스를 들으며 허탈하고 절망감만 느꼈을 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김동연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 등에 비밀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7월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까지 하면서 앞선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부총리, 이 말에 동의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썄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柳在仲 의원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한 재정자료에 비밀표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심 의원님께서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비인가 영역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여섯 차례에 걸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자료의 용도가 감사관실용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시거나 또는 취득하시거나 또 다운로드받거나 공개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在仲 의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비밀표기되지 않은 것은 공표해도 되고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위반이라 그러고……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숨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들짝 놀라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

도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반납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또 이것이 계속해서 유포·공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柳在仲 의원 부총리님, 당당했었다면 얼마나 지 유포되어야지요. 국민이 알아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지요. 의원님, 당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 전수로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柳在仲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하십시오.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柳在仲 의원 김동연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본 의원은 청와대 각료라든지 또 장관님들이 임명되는 것 보고, 실무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 학자 정치인들이 임명됐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가 임명되는 것 보고 과거의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신뢰가 가고 기대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경제정책을 맡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일 경제지표가 나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柳在仲 의원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아주 면밀히 보고 있고요. 수출이나 민간사업이나 성장 이런 점에서는, 물론 질적인 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심하게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또 민생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주 엄중히 보고 있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柳在仲 의원 경제부총리와 본 의원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정히 보셔야지요, 그냥 이 경제 상황을. 왜냐?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전망치가 0.3% 하락한 2.7%로 잡았습니다.

부총리,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제기구에

서, IMF도 지금 비슷한 저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 무역환경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기는 합니다. 작게는 0.1%p부터 0.3%p까지 낮추고 있고 특히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더 낮추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하반기 경제 운영할 적에 2%대로 낮춘 적이 있었고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제기구에서는 말씀 올린 것처럼 선진국, 개도국 또 특별히 영향을 더 받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낮추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충 한 0.2~0.3%p 정도 금년에 낮추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柳在仲 의원** 대처를 미리 못 했습니다. OECD가 미리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대통령 임기 동안 54%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의원님 알고 있고요. 또 IMF에서도 작년에 총재도 오고 금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전체 문맥을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도 있었고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지만, 다만 2년에 걸친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국제기구로부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柳在仲 의원** 수출이 지속되고 북한 리스크도 낮아졌는데 국내의 경기지표가 오히려 최악을 기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여러 가지 접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해 문제가 아닌 여러 해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 또 최근의 경기 문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용성을 감안했을 적에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柳在仲 의원**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고용지표 악화와 내수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부총리,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柳在仲 의원** 화면에 전국 주유소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갖고 3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겁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들, 취약계층이지요. 정부의 선부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분들에게 목숨과 같은 일자리를 빼앗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 사과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아까도 제가 가슴에 솟구치는 말을 안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비투자과 건설 투자 쪽에서 6개월 연속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이와 같은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쪽에서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연령층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柳在仲 의원** 부총리님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론은 지금 이런 정부 정책을 가지고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든지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무역, 금융 여건을 고려했을 때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부총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

도 반성하고 되돌려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기다려 달라는 생각으로…… 뭔가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고 통계가 나와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정책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리면서 구조적인 문제 속에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나 소득재분배의 왜곡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와 사회구조 개편을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쓰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몇 차례 말씀 올린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 그러면서 시장과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쪽에서의 활력, 활성화 제고, 이것이 같이 봐야 되는 측면에서 정책을 양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화롭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在仲 의원 부총리님도 청와대에 계신 분의 말씀과 똑같네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 이렇게 태평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합니까, 부총리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서로 이야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치러야 될 코스트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시장과 국민의 수용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책 성공의 가장 첫 번째 요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느끼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완 또는 조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在仲 의원 정치인으로서 또 하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화면의 자료는 우리나라보다도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기업들이 부산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서로 대학생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젊은 대학생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총리님도 총장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심정을 이해하시면……

일자리는 정부가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총장을 하면서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재정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의원님이 질문 주신 취지처럼 민간과 시장에서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장과 기업에 어떤 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하는 마인드를 할 것인지 하는 생각,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거든요. 미래 먹거리라든지 또는 기존의 주력 제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단기부터 중기, 장기에 이르기까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또 정부 정책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문제를 같이 계속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在仲 의원 그런데 결론은 이론과 생각들은 옳게 가고 있는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부 엇박자 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이나 청와대 경제참모의 생각이 엇박자가 나니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못지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도 문제입니다. 8월 구직급여는 역대 최대치인 61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 증가해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고용보험을 낼 여력이 있는 그나마 경영사정이 괜찮은 기업의 해고가 늘었다는 뜻인

대요 이것도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책임 통감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실업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봐야 된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제고되어야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가 조금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업급여나 전직훈련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신 말씀의 취지는 이것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일자리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柳在仲 의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봐야 됩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주도했던 이현재 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대로라면 암흑한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또한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켜 온 많은 선배들이, 관료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도……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인용하신 분들은 공직에서나 사회에 있을 때 선배님들이시고 정말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세 번째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와 대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석학이나 선배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기나 구조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라고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정책으로 소화하고 이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참고하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 의원 부총리님,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늘리기에 무려 54조 원에 달하는 돈을 부었는데 어떻게 쓰였고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54조는 17년, 18년 본예산과 양 연도의 추경을 합친 금액입니다. 작년 17년도에 일자리가 32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월, 8월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자꾸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대입 또는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작년에 32만 개 만들어졌고 금년 상반기에 14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월 평균 14만 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 18년도 일자리 예산을 합치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6조~37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접 일자리 예산은 6조가 안 됩니다. 내년 예산 23조 5000억 기준으로 하면 10조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비용들입니다. 그런 비용들은 과거에도 써 왔던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조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매칭이 잘 안 되고요. 그중에 정말 직접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간접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또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이런 것을 조금 발라내서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작년도 또 금년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일자리 만드는 데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금년 하반기 7, 8월에는, 특히 8월에 서비스가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 숙박, 음식 또 기관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8월 달에 한 3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공공행정 서비스, 보건 서비스 쪽에서는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은 재정집행의 효과라고 저희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柳在仲 의원 부총리 취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柳在仲 의원 1년 3개월 동안 없어지는 일자리, 구하지 못한 실업률, 전 정부가 그대로 이어졌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더 잘해야 될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부총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직접 겪는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취업을 명분으로 해서 자생력 없는 좀비기업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생산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통계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삼성전자도 찾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柳在仲 의원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덩달아 국민소득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님?

그런데도 현 정부는 오히려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런 말을 했지요 ‘기업이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애니멀 스피릿(animal spirit)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주변의 환경에 달려 있다’. 지금 정부가 펼치는 이 일자리 정책과 반기업적 정서, 어떻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해 문제로 수십 번을 압수수색하고 기업들이 압수수색 안 당하는 기업이 없고, 물론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벌칙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불의로 몰아가고, 기업을 혼내고 왔다는 그런 경제정책 입안자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업인들이 과연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까?

이런 기업을 보호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부총리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만이 보호하고 자리를 걸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질문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나 또 제가 우리 경제팀과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반기업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

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기업적이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시장 쪽에서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고 또 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분들도 만나 가지고 그와 같은 메시지도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공정한 경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있을 수 있는 편법·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기업과 시장에서 기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또 아까 말씀드린 애니멀 스피릿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규제로 봤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柳在仲 의원 그러시면 기업이 애타게 기다리는 규제개혁은 하고 있습니까? 노동의 유연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말로만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일은 아니지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외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데 4차 산업혁명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정치인들 공약하고 관료들 회의를 만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규제개혁도 해 줘야 되고 노동 유연성도 줘야 되고 법인세도 낮춰 줘야 될 것이고 배임죄도 완화해 볼 수 있으면 완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좀 미흡하시겠지만 같은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또 플랫폼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민간 부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

다. 어디까지나 민간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되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핵심 인력 양성이나 생태계 조성 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개인정보라든지 인터넷뱅킹이라든지 또 의료 쪽에서 몇 가지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개혁의, 핵심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저나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경제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소망은 이런 중에서 기업들이 볼 적에 저 정도 문제에 손을 대는 걸 보니까 정말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고.

또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들을 저희가 수십 건을 그동안에 풀었고 계속 풀고 있고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고 이런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시겠지만 이 규제개혁이 여러 가지 기득권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柳在仲 의원** 쌍용차 복직 과정에서도 나타났 다시피 생산성을 높이니까 해고자들이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성기조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포스코도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류 기업들이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입니다.

합리적인 노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노조에 너무, 이 정부가 친노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포스코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부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일자리나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 단계로서는 우리가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가 현저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노동시장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을 보여 주면서 일정한 단계에 가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문제와 함께 사회적 대화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나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같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柳在仲 의원** 중국과 미국 등이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부르짖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습니다마는 실천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참 걱정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서 부총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불가역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필요한 보완조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나 국회나 다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미리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柳在仲 의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대통령은 바로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면서 경제를 해야 됩니다.

부총리는 4월 추경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9월 고용지표는 최악을 기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만두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경제이론을 전파해야만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서 믿음이 안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청와대 정책실하고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의견 조율을 정기적으로 또는 그것보다도 자주 만나서 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정말 솔직하게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까요.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진다면 제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대통령 모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고용 상황 또 앞으로 단기간 내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제 의지를 표현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柳在仲 의원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미래세대들이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유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의원(269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성일종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규희	이만희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지상욱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100인)

강병원	강효상	강훈식	곽상도
권미혁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찬	金成泰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용태	김정재	김종훈
김중로	김태년	김해영	김현미
맹성규	문희상	민병두	박경미
박덕흠	박완수	박재호	박정
박주선	백승주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형수	손혜원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희경	신용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여상규
염동열	오영훈	유승민	유의동
윤소하	윤일규	윤종필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돈	이상현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정미	이종명	이진복	이채익
이철희	이혜훈	이후삼	인재근
임재훈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정갑윤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운열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철호
○속개 시 재석 의원(68인)			
강길부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재원
김정우	김중로	김현미	노응래
민홍철	박병석	박성중	박완수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신용현	심기준	심재권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윤상직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호중	이개호
이규희	이상현	이양수	이용호
이원욱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이진복	이철규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임이자	장병완	장정숙
장제원	정병국	정유섭	정춘숙
조승래	주광덕	진영	추경호
홍영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산회 시 재석 의원(74인)

강석진	강효상	곽대훈	곽상도
김광림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재
김종석	김한표	김현미	남인순
문진국	문희상	박경미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정	박주현
박홍근	백승주	송기현	송희경
신동근	신용현	안상수	안호영
염동열	위성곤	유동수	유재중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이개호	이규희	이원욱	이은재
이정현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학재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임종성	전혜숙	전희경	정성호
정유섭	정종섭	조승래	최경환(평)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추경호
함진규	홍영표		

○청가 의원(20인)

김부겸	김한정	나경원	도종환
설훈	소병훈	신보라	유민봉
이동섭	이수혁	이재정	이종걸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조원진
주승용	진선미	추미애	홍익표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수 흥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 동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 윤 모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김 상 조
 금 융 위 원 장 최 중 구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임재훈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018. 10. 1.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오세정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018. 10. 1.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임재훈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2018. 10. 1.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김영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2018. 10. 1.
문화체육 관광	유은혜	김영주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2018. 10. 1.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사직	2018. 10. 1.

○의안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윤일규·조승래·안호영·신동근·김현권·전혜숙·정춘숙·기동민·남인순·

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윤일규·조승래·안호영·신동근·김현권·전혜숙·정춘숙·기동민·남인순·김상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장병완·윤영일·김종희·정인화·이용주·김경진·조배숙·박지원·장정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백혜련·박찬대·원혜영·강창일·송기현·이철희·김병기·남인순·김현권·오영훈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채이배·오신환·김삼화·김성식·주승용·김수민·권은희·이태규·신용현·이찬열·오세정·유승민·추혜선 의원 발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경대수·정진석·김재경·정갑윤·권성동·김선동·여상규·박덕흠·김재원·이종배·김기선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기선·박덕흠·김상훈·원유철·권성동·김도읍·곽대훈·이채익·이철규·경대수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원혜영·서영교·권철승·박정·추미애·박주민·박경미·이춘석·백혜련·전혜숙·금태섭·김병기 의원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용주·김경진·김광수·박주현·손금주·안호영·윤영일·이용호·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오제세·이상돈·이찬열·정태옥·정춘숙·강병원·이언주·강길부·전혜숙·권칠승·노웅래·백재현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정갑윤·김종석·조훈현·곽상도·성일종·김석기·문진국·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최운열·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나경원·권미혁·조배숙·서영교·송옥주·김종석·김삼화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오제세·이찬열·김광수·강병원·이언주·전혜숙·권칠승·노웅래·박덕흠·홍문표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오제세·이찬열·김승희·전혜숙·기동민·권칠승·윤종필·이명수·홍문표·박덕흠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신용현·김삼화·채이배·최도자·최경환(평)·김광수·김병관·유승민·장병완·이동섭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변재일·김성수·박홍근·이석현·김경진·이종걸·이철희·박광온·윤호중·노웅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상희·김병기·민홍철·백혜련·정춘숙·남인순·윤소하·송옥주·박정·윤일규·이규희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

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황영철·조경태·함진규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희·김민기·김종민·백혜련·박정·안규백·강훈식·민홍철·원혜영·금태섭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조정식·윤영일·박명재·이현재·김석기·이언주·추경호·박순자·정성호·여상규·주승용·김관영·이종구·권성동·윤관석·김정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오제세·이찬열·정춘숙·노웅래·이언주·전혜숙·권칠승·박덕흠·홍문표·이명수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8. 10. 1. 이철규·송언석·한선교·박인숙·김성원·곽대훈·이만희·김학용·김광립·장석춘·윤한홍·박맹우·이종배·김기선·이혜훈·김규환·박성중·김정재·송석준·경대수·황영철·정양석·정진석·김석기·강석호·조훈현·민경욱·최교일·추경호·윤상직·김명연·나경원·金成泰·임이자·문진국·함진규·유재중·김세연·강효상·홍일표·김선동·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2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이용주·김경진·김광수·박주현·손금주·안호영·윤영일·이용호·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인권교육지원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정성호·윤관석·정춘숙·김상희·이춘석·박정·주승용·기동민·김영호·김정우·이해찬·표창원·안민석·오제세·박주민·정동영·금태섭·홍익표·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정성호·윤관석·김상희·이춘석·박정·주승용·정춘숙·김영호·김정우·기동민·표창원·정동영·금태섭·홍익표·유승희·오제세·박주민·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학교측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수능시험생 구제 방안에 관한 질문서

(2018. 10. 1. 金成泰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국군 부대 활동 보고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계획의 집행 실적

(이상 2건 2018. 10. 1. 정부 제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18. 10. 1. 국군사이버사령부(비공개)

2018. 10. 1. 국방정보본부(비공개)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10. 1.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세정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18. 10.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오세정 의원의 사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임재훈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